

제42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8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2.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상정된 안건

1.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 2
2.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 2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에 예결위로부터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예결위 및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결위의 새 비목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관련한 비목이 새로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추가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 합니다.

이 중 류정환 부사장은 자발적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증인 류정환 예, 동의합니다.

## 1.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 2.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SK텔레콤 측의 허술한 보안 체계와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 내 국민의 통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십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십니다.

(인사)

오늘 청문회를 위해 8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

명이 불출석하였으며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증감법상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증인 유영상

증인 유상임

증인 강도현

증인 이진숙

증인 류정환

증인 이상중

○위원장 최민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지금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위원님들이 매우 바쁘십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발언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김현 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참하고 부위원장은 국회 담당입니다. 차관회의에 들어가는 상임위원이 있고 부위원장 역할 중에는 국회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안 하고 지금 불출석했습니다.

지난주 4월 30일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 이진숙 위원장이 심각한 국내 상황, SK텔레콤이 해킹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정을 그대로 가져감에 따라서 미국에 다녀와서 그때 김태규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이 어쨌든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2시니까요 과천에서 오는 시간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시까지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안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부분은……

○**김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혹시 이진숙 위원장이 알고도 안 나오는 것을 허락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안 나오는 것을 그냥 허락한 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 혹은 사무처장 대행 나와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즉시 확인하세요.

지금 최형두 간사님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릴 텐데 그사이에 연락해서 일단 소재 파악부터 좀 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아니, 김태규 언제 출석요구 의결했지?

○**김현 위원** 제가 요구했습니다. 원래 나와야 돼요, 부위원장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신성범 위원** 위원장 나와 있잖아요.

○**김현 위원** 국회 담당이에요, 부위원장이.

○**위원장 최민희** 이 사안은, 지난번 저희 청문회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사실 위원장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대개 위원장과 같이 출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시비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해 주십시오.

아니, 저도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형두 위원** 잠깐, 저도……

○**김현 위원**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관이 나오면 차관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의사진행, 저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지금 과기정통부도 장관님과 차관님이 같이 나와 계시듯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특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안질의를 하고 SK텔레콤 문제로 대한민국에 정말 큰일이 터졌을 때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당시 청문회에 나왔던 부위원장이 나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소재 파악해 주시고요.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방송통신위원회를 워낙 잘 아시니까, 김현 간사님은 또 부위원장도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체제가 방송통신위원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의 5인 체제랑 좀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얘기가 SKT를 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지금 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 다녀오시면서 FCC 문제 같은 것도 좀 듣고 오셨을 테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는 그것은 별로 설득이 안 되는데요.

○**최형두 위원** 안 됩니까? 2명밖에 없는데 1명은 기관을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왜냐하면 FCC 위원장 만난 내용과 이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좀,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실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오늘 SK텔레콤에 집중할 텐데요. 오늘 방통위와 관련된 것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가 방통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여쭙보면 될 것 같고요.

소재 파악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래 걸릴 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지금 최태원 SK 회장,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회장 출석을 요청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 통해서 사실 SK그룹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태원 SK 회장의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회의가 2300만 SKT 고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2년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SK C&C의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나서 대국민 사과를 이곳 과방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사고로 275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당시 화재 책임이 있는 SK C&C 아직 까지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SK C&C의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한 70억 원밖에 안 돼서기도 하고요. 피해보상 관련된 공방은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과방위에 나와서 저렇게 직접 사과를 한 사건도 그러했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 준 모습으로 고객들은 어떻게 SK그룹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런 사고 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증인 유상임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되지요.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SK텔레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겠지요?

○증인 유영상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SK C&C 책임보험 한 70억 원 보험 한도라서 아직까지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은 배상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유영상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10억입니다. 7분의 1이에요.

국내 가장 큰 통신사가 든 보험이 연납입금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든 보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보완 문제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또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지요? SK C&C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3년 넘도록 공방만 하실 건 아니라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이해민 위원 정부 관리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에만 책임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KISA 원장님, 2022년도에 KT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유심 정보 탈취 의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피해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KT는 유심 기변을 한 달 넘게 일괄 차단을—굉장히 센 보호조치지요—일괄 차단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기정통부, KISA, 중앙전파관리소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인 이상중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때 합동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종결을 했고요. 피해는 KT 고객에서만 36건 이상이 발생을 했고 어떤 건은 2억이 넘는 피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관계 입증을 못 했습니다.

혹시 이것 피해보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2023년도 7월에는 LG유플러스에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어떻게 알았냐면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었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68억 원 처분하고 끝났습니다. 개인에 대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없던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팔리고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이번 건에 대해서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KISA의 노력 그다음에 KISA의 책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폐쇄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게 고의든 실수든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의심 정황이 있습니까?

○증인 이상중 제가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할 수는 없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KISA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성코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져 있는지 혹시 발견이 됐을까요?

○증인 이상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이해민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온 악성코드가 추가로 여덟 가지 종류가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 네 가지 종류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여덟 가지 더 발견된 것들이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개인식별정보가 보관된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을까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서버에 대한 해킹이 전혀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인 이상중 지금 현재 언론 보도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BPFDoor 악성코드 자체가 오픈소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VPN 장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근 가능합니까?

○증인 류정환 불가능합니다.

○이해민 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증인 류정환 예.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SKT에서는 VPN 장비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증인 류정환 VPN 장비는 사용하는데……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해 났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VPN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은 100% 없다.

○증인 류정환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고요. 들어오는데 방화벽을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VPN 장비는 이반티 장비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지금 이반터 장비가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있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이해민 위원 이 대답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KISA 원장님 대답이 좀 아쉬운데요. 대부분 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KISA. 지금 KISA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 지금 비슷한 사고가 줄줄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말씀드렸고 LG유플러스 말씀드렸고 이번에 SKT잖아요. 그리고 피해는 고객한테 발생을 해요.

정부는 과연 여기에서 책임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단이 꾸러지지만 조금 버티면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나면 또 별일 아닌 듯 지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는 처벌 수위 높여서라도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 열심히 하게 하고 중대과실 없게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이 사실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이 부분은 사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업의 중대과실 확인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업에서 나와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말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 이야기를 하면 미국처럼 한 번 실수로 기업 다 죽이겠냐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사용자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고, 이번에 고객들 살리려다 망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요. 계산하고 자리 보전하려다 망하면 회사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하고 더불어서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후속 법안들 추진 예정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차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정보보호 최소 투자비율 의무화 부분이 있고요. 위약금 면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제 실효성 제고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등에 대해서 저는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이야기가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KT 쪽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입장문을 보면 현재 SKT 사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또한 제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위약금을 내냐 마냐, 면제를 하냐 마냐 그런 것은 사실 각론에 더 가깝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떠나겠다는 것이잖아요.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가동하겠다는, 혹시라도 세 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인 유영상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특히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객 정보 보호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FDS나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까지 보호에 집중해 왔는데 사실 고객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드리고.

일단 한 가지, 어제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저희가 조속히 설치해서 그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의 어떤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공감을 하겠다고 하셨고,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방안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 위약금 문제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증인 유영상**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시는 건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호 대책 그다음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바로 발표를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떠나가는 것 그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 당연히 다시 나오지요. 이 부분은 대처를 빨리하셔야 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VPN 이반티 얘기를 하셨는데 SKT는 SK쉴더스의 파트너입니까?

○**증인 류정환** 예, 저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작년에 SK쉴더스에서 이반티 VPN 장비에 대해서, 해킹 관련해서 우려를 표방하고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체크리스트 열 가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SK텔레콤에서도 받으셨습니까?

○**증인 류정환**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걸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어떡해요. 이미 지난해에 악성코드 관련돼서 얼러트(alert) 났었고 거기 관련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우스코리아에 있었다 한 달 전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쉴더스에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열 가지 대책 체크리스트 공유하면서 ‘이러 이러한 VPN 취약점이 발견이 됐으니 조치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약에 SK텔레콤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웃긴 꼴이고요. 최태원 회장 나오셔서 사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행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SK쉴더스의 능력에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안 조치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뢰 회복, 이 투트랙 말씀하셨는데 앞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께서 아마 지금 기술적으로 리드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SK쉴더스에서 VPN 장비에 대한 문제점 지난해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증인 류정환** 지금 말씀 좀……

○**이해민 위원** 지금 너무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부분은, 특히 VPN 장비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인 문제 체크하셔서 의원실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가상사설망(VPN)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해민 위원 제가 설명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위원장 최민희 보고 있는 분들이 VPN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누구에게 물어도 좋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거는 아마 고려대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VPN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장비까지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예.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 VPN은 암호통신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 컴퓨터 간의 통신하는 모든 것을 암호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용하는 목적은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원격근무를 할 때 회사 시스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증인 류정환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얘기하시지요.

○증인 류정환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는 월더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들었다기보다는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반티 장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침해 사건이 나기 이전에 이미 조치를, 파워 오프라든지 아니면 격리라든지 아니면 신형 장비로의 대개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지금 쟁점은 VPN 장비를 이반티라는 제품을 썼는데 그것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해킹과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그런데 방화벽을 쳤다고 답하신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 사이에?

○증인 류정환 그러니까 VPN이 들어오기 위해선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방화벽 다 있는데 뚫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증인 류정환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위원장 최민희 그건 답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과천청사에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몇시인가요?

○김현 위원 2시 30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4시까지 출석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4시까지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울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이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오늘 SK 측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나 약속을 못 하면 저는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K 측에서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K 유 대표님, 지난주 청문회 때 본 위원이 SKT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요청드렸지요? 하나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보호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번호이동에 대해서도 그날 약속을 했어요.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증인 유영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영상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안 했으면 위증이에요. 영상에 있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훈기 위원 그런데 SKT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사장님?

○증인 유영상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해석을 하신다면 그 유권 해석을 참조해서 이사회와 조금 전 말씀드린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SK에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이런 것 발표했지요? 여기 보면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훈기 위원 지금 위약금 면제를 하면 해약·해지해서 번호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SKT는?

○증인 유영상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될 걸로 예상……

○이훈기 위원 10배면 대충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정확하게…… 해킹 사태 이후로 한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한 250만 명 예상한다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해약하면 일인당 평균 위약금이 얼마나 들어요?

○증인 유영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면 얼마 들어요?

○증인 유영상 2500억입니다.

○이훈기 위원 SKT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증인 유영상 1조 8000억입니다.

○이훈기 위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얼마예요? 5590억이에요. 올해 이 예상치대로 가면 2조 2000억이 넘어요. 지금 얼마 든다 그랬어요, 10만 원씩 하면? 2500

억?

○**증인 유영상**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 300만의 고객이 움직이시면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고객께서 보통 한 3년 정도 계시는데 3년치 매출로 계산하면 몇조 단위가 됩니다.

○**이훈기 위원** 사장님, 여기 SKT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약금만 따지면 2500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위약금은 그렇고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하면……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예측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8000억이 났고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590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때문에 못 하겠다? 그리고 저번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룹 회장은 어제 사과한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진정성이 없잖아요. 저는 SKT가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KT 작년 매출이 얼마예요?

○**증인 유영상** 별도기준으로는 한 12조 정도 됩니다.

○**이훈기 위원** 12조, 17조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연결기준은 17조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SKT 정보보호 투자액 600억 아니에요. 가장 적은 정보보호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매출액의 0.56%, 영업이익 대비 3%예요. KT나 LG유플러스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썼어요.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형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지금 SK가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거지요?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엄청 치렀잖아요. 가서 불안해하고 유심 갈려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그 비용은 추산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거를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통신 1위 기업이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리고 아까 비용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드네요, 위약금이 일인당 10만 원이라고 평균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저는 한 50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증인 유영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SK텔레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좀 더 복잡한 사안이라서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고 수습을 하면 SK는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더 이익이에요. 확실한 1위 기업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끝없이 추락하거나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 판단을 못 하세요?

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2300만이면 국민의 반이 SKT를 쓰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여기 청문회장인데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답변하지 마세요. 저번에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답변은 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도대체?

위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최태원 회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최태원 회장님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 지실 수 있어요.

위약금 계속 못 하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동통신 생태계와 또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손해,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훈기 위원 아니, 국민들의 피해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SK만 중요한 거예요, SK 주주들하고?

○증인 유영상 향후에 저희들이 일단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그 보상과 배상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사장님,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아주 분노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회장님도 안 나오시고 사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가입자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어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아니, 그 많은 가입자나 국민들이 1위 기업을 만들어 주고 수십 년 동안 가입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뢰를 이렇게 깨 버려요, 그냥 기업 논리로?

○증인 유영상 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과기부장관님.

○증인 유상임 예.

○이훈기 위원 이용약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약관이?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증인 유상임 ……

○이훈기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얘기하세요.

○증인 강도현 통신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이훈기 위원 승인을 하는 건가요?

○증인 강도현 신고 사항입니다.

○이훈기 위원 신고 사항인가요?

○증인 강도현 다만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훈기 위원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하면 해 줘니까?

○증인 강도현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훈기 위원 검토 안 합니까?

○증인 강도현 검토합니다.

○이훈기 위원 검토하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러나 뭐 신고 사항……

○이훈기 위원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면제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SKT 이용

약관에.

○증인 강도현 예, 맞습니다. 4항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과기부에서 그 이용약관 그렇게 해 줬으니까 SKT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 문제?

○증인 강도현 예,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했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 조사 결과들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

○이훈기 위원 지난번에 1차 청문회 때 세 군데 로펌에 법적 자문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한 일주일이지났어요. 그 결과 나왔나요?

○증인 강도현 일단 자료를 어제 아침에 받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훈기 위원 세 군데가 다 나왔나요?

○증인 강도현 예, 자료는 받았습시다. 그걸 종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기해 주셨던 문제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네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커지는데 빨리 조속히 법적 검토를 공개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기부도 책임이 있어요. 이용약관 승인한 기관이기도 하고.

○증인 강도현 주셨던 귀책사유에 정해져 있는 약관에 대해서 귀책사유의 범위와 내용, 판례 부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리고 국회도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면제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면제해도 이상이 없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리를 했어요.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 국회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증인 강도현 위원님, 그 세부 내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SKT는 법적 검토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증인 강도현 예, 과기정통부 법적 검토에 대한 말씀을 주셔……

○이훈기 위원 과기부에서 법적 검토를 안 해 주니까 안 한다고 지금 SK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강도현 그러니까 법적 검토라는 내용이 귀책사유에 해당 여부, 면책에 이르는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례 그다음에 저희의 자문, 거기에다가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SKT 사장님,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여기 로펌 결과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즉시 이행하겠습니까, 위약금 문제?

○**증인 유영상** 저희 내부 로펌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부분도 같이……

○**이훈기 위원** 아니,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적 검토 이렇게 하고 과기부에서 4개 로펌에 줬는데 그 결과를 부정하고 SKT 내부 관계하는 로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SK는 하기 싫은 거지요, 위약금 주는 게? 얘기를 해 보세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증인 유영상**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임팩트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얘기하신 건 위증이에요, 1차 청문회 때?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제가……

○**이훈기 위원**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증인 유영상** 제가 종합적으로……

○**이훈기 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위증으로 고발할게요.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 SKT 해킹 관련해서 ISMS 인증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부기관, 정부의 대표적인 인증 제도인데 이번 사고가 있을 때 전혀 역할을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상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감독의 의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관님이 얘기 좀 하시지요.

○**증인 강도현** 현재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서면심사를 거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하고 상의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의 해킹 훈련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SK 사장님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도현 차관님, 과기부가 판례 포함 법적 검토 결과를 내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증인 강도현** 지금 여러 사정에 보면 그 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규정이 되는 건데……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언제까지 결과를 내실 겁니까?

○**증인 강도현**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고 법적 검토 결과 나오고 그거 다 합쳐져야 SKT에 대한 정부 측의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증인 강도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사안이 흐지부지되기를 SKT는 기다리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불신이 가라앉질 않지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기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SKT가 하는 모습을 보면 SKT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제가 SKT의 책임자였다면 고객들이 지금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주겠다는 기본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한 경우에 피해 보상하겠다고라는 문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발상 자체가 피해를 너희들이 입증을 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책임질게 이런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태원 그룹 회장께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사과하면서 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요, 유영상 증인?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맞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얼핏 들으면 중국 해커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서 우리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국가안보적인 문제다, 마치 SKT가 피해자인양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 청문회에서 박정훈 위원님께서 신규가입 중단 조치……

○박정훈 위원 그거 이따가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하세요.

○증인 유영상 저 내용 자체는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SK그룹에 있어서 이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국방과 같이 중요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같이 중요한 어젠다로 보안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피해 배상, 사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메시지를 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저도 지금 32년째 SK텔레콤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태로 이 통신사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SKT는 SKT 회사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약관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약관.

약관 43조를 보면 ‘각호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굉장히 심플해요. 고객들은 이미 금전적으로 무슨 피싱을 당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정신적 불안 이런 걸로 이미 피해를 본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세요?

○증인 유영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정훈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불안해서 내가 이 전화로 금융거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쓰면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까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SKT만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데 SKT는 자사 이기주의 때문에 그 상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렇게 심플한 거를, 아니, 우리 이미 법률적으로……

과기부 강도현 차관님, 법률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저게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증인 강도현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와 내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현재 법률 자문 결과에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니, 내가 이걸 해지하고 싶은데 SK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해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지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저 조항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할 경우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걸 더 따져 보고 판례도 보고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증인 유상임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과실 여부, 현재 정보보호기술 수준, 사업자의 정보보호조치 등 이러저러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물론 당연히 고려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업이 지금 신뢰를 완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잃게 생긴 상황에서 그런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지요.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SKT를 믿을 것 아닙니까?

○증인 강도현 위원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다 답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기간을 여쭙보셨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조치가 마무리될 거냐. 그랬는데 이게 한두 달 더 걸릴 것처럼 과기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과기부가 SKT,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겠지요? 절대 아니겠지요?

○증인 강도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 유상임 예,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조치를 해야지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렇게 큰데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애

기하면 국민들이 과기부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리 검토는 아마 조속히 이루어질 거고.

단지 마지막 참고해야 될 사항이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가 마지막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유상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SKT가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질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SKT만 정보보호 투자액 현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게 슬라이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입자 1명당 2400원이고. 물론 그때도 KT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높다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40%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는 통신업체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보보호에 대해서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영상 증인, 지금 손해배상 한도액을 얼마까지 보험 가입하셨어요?

○**증인 유영상** 그 가입은 아까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훈 위원** 10억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될 문제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험 조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정보보호를 위해서 투자한 액수도 적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면 노력을 게으르게 한 거잖아요. 잘했는데 저한테 지금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저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대충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2500억이면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그게 위약금이 2500억이고요—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그 가입자 매출 손실은 수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훈 위원** 거기에 지금 단말기 단말기 보조금이나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아요?

○**증인 유영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위약금이 있고요. 또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선택약정할인, 25%를 할인받습니다.

○**박정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혼재돼 있어서 그것까지 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고 하니까 그걸 구분해 내고 순수하게 위약금만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냐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그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위약금입니다. 단말기를 할인받으신 거나 선택약정을 받으신 거나 다 같은 위약금이고요. 그 부분에서 고객 차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난번에 면제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가서 혼나시고 오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정정드리면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기부 법률 검토가 위약금 면제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정훈 위원 그러면 과기부 빨리 내셔야겠네요, 결론을.

○증인 유영상 그런데 그것은 좀 복잡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위원 이사회에서 이걸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던데 이사회 개최하셨지요?

○증인 유영상 예,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개최해서 어떤 논의 하셨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

○박정훈 위원 위약금 문제 논의하셨어요?

○증인 유영상 위약금 논의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증인 유영상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의 손실 규모 또 이동통신 생태계에서의 여러 가지 고객 차별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 손해 덜 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사회 결론 냈다 이거예요?

○증인 유영상 결정을 지금 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해 주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증인 유영상 그 부분 명확……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박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결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위약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과기부에서 그 결론이 나면 해 주실 거예요?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위원 CEO 아니세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CEO시잖아요.

○증인 유영상 예, 그런데 CEO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SKT는 어쨌든 과점 상태로 국가의 통신망을 쓰는 업체잖아요. 국민들로부터 혜택을 보는 기업 아닙니까? 이게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어느 정도는 땅 짚고 헤엄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SK텔레콤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다 책임지실 거예요?

○증인 유영상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K텔레콤이.

○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되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가입자가 2500만 명 정도 되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그러면 위약금 면제하면 10% 정도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맞지요?

○증인 유영상 최소 10%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최소 10%?

○증인 유영상 예.

○박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25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박정훈 위원 써 준 것 보고 읽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하세요.

○증인 유영상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45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한 500만까지. 그랬을 경우에 위약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 한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이 너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을 정치권에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피해를 배상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럴 각오로 하시라고요.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훈 위원 최태원 회장님 어제 나오셔서 안보 문제 이런 걸로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국민들 다 알아요. 진술한 반성 거기서부터 SKT에 대한 신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돌아가셔서, 총수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잘 설득하셔서 결단을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어제 최태원 회장의 사과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K텔레콤은 물론이고 SK그룹 전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입자들의 피해보다는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통해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존립 기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존립 기반에 대한 우려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고객 우선, 가입자 우선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는 SKT와 SK그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주 동안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유영상 대표께서는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이라도 피해자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 전반을 돌이켜 보면 SKT가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결정적

인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능장 대응하고 소통도 부신했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제가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통신망이 다운될 수 있다, 그래서 자동가입을 못 한다고 했는데 과기부에서 행정지도를 내리니까 곧바로 자동가입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던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유영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2500만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일괄 가입을 시켰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꼬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술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이정현 위원** 그랬던 것인데 순차적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이정현 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니까 가입자들의 분노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주요 쟁점,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지난 청문회에서 과기부도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법률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고 다음 날 5월 1일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를 내리신 바가 있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정부 측의 법률 검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아니, 어제 아침에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행정지도를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면제사항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라 이런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아직은 내리지 못한 겁니까, 과기부는?

○**증인 유상임** 예, 저희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면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유상임** 이것은 방금 유영상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는 또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밀한,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자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불법유심의 복제 피해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장관님?

○**증인 유상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까지 없으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 유상임 글썄요, 그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정현 위원 단정할 수 없지요?

○증인 유상임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증인 강도현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해킹 수법이 워낙 고도화돼 있고 치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강도현 예. 현재까지 피해 보고가 없다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유영상 대표님, 앞서서도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고객 이탈로 인한 손실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들의 피해보다는 고객 이탈로 인해서 회사가 입을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조 원, 7조 원가량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가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유영상 가입자 보호에 대해서 지난 청문회 이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전원, 어제부로 2400만 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 가입이 됐고요.

○이정현 위원 뭐라고요?

○증인 유영상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 날 로밍까지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가 저희가 개발이 돼서 14일까지는 로밍 가시는 고객까지도 전부 유심보호서비스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대표님, SKT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대응 그리고 지금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여전히 모호하고 시간 끌기 식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재 SKT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당장의 수조 원, 수천억 원의 손실뿐만이 아니요 신뢰 파탄의 위기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형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SK텔레콤 자산의 큰 붕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런 핵심 통신인프라를 SKT에 과연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지금 들고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국민적 의구심과 반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핑계도 좀 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약금이 5만 원 남는 사람이나 30만 원 남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이용자 차별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위약금 면제라는 것은 계약의 행위인데 그 계약의 행위가

전체로……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지금 설명은 회사가 입을 손실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약금의 형평성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SKT가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T에 남아 계시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한 뒤에 더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보답하겠다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해를 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만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성실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시장질서에 대해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다가 정말 불성실한 대응으로 한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T world’ SK텔레콤 간판이 선명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이게 SKT의 공식 대리점이겠지요?

○증인 유상임 예.

○이정현 위원 그렇게 보이시지요?

○증인 유상임 예.

○이정현 위원 유영상 대표님, 어떻습니까? SKT 공식 대리점으로 보이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SKT 공식 대리점이 아닙니다. 이 사진 속의 매장은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은 SKT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통신사를 함께 취급하는 유통망입니다. 아시겠어요?

○증인 유영상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하고 대표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가입자들이 저걸 SKT의 직영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유심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몇 시간 뒤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판매점이니깐 무료로 유심 교체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 그냥 봐두실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영상 저도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지금 저희 유통구조가 직영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판매점이 있는데요. 판매점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도매대리점, 판매점이 유심 교체는 유료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이 몰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돈을 받고요.

이분이 얼마를 냈냐면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수증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7700원의 유심 교체료를 내고 결국에는 유심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SKT의 공식 대리점 안내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하고 앱에서 말이지요.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실이 SKT의 판매점을 통해서 유심을 유료로 교체한 고객에 대해서 환급이나 감면을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4월 28일 이전에 공식 대리점이 아닌 경로를 통해서 유심을 유료 교체한 고객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데 4월 28일 이후에 유료로 교체한 사람들은 감면해 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4월 28일 이전은 되고 28일 이후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유영상 저희가 발표한 것은 28일부터 SK텔레콤 2600개 매장에서 교체하신 분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28일 기준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판매점이나 직영점에서 가입한 사람들에 따라서 SK텔레콤의 고객이나 아니냐가 달라집니까? 판매점에서 구입한 고객도 SK텔레콤 고객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냈다고 한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자동으로 하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2500만 명, 알뜰폰까지 합하면 그렇게 25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SK텔레콤의 고객들 중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증인 유영상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유영상 대략 한 3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300만 명이요? 그게 정확합니까?

○증인 유영상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정확한 것을 아셔야 되지요.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이번에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얼마 지나서 해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디지털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MBC 뉴스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은 이렇게 힘들게 현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유심보호서비스 물어보니까 ‘아니아니, 그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께서 SKT 유심 해킹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예약이 어려워서 그냥 폰을 꺼 두려고 하신답니다. 폰을 꺼 두면 해킹 피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SK텔레콤이 고령자나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유심교체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만 명이 됐든 500만 명이 됐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의 유심을 직접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또 택배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교체를 해 주도록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자들,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조 원, 수천억 원의 회사 손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증인 유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증인 유영상 유심 교체 관련해서는 지금 예약 들어오신 분들이 한 800만 정도 있고 시고 현재 한 110만 정도 고객분들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심 교체와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유심 포맷이라고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하고 난해해서 취약계층은 몰라요.

○증인 유영상 그래서 취약계층께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정현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셔야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출된 정보로 휴대폰이 복제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훔쳐 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금융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김승주 일단 유심 정보라고 하면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값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일 겁니다. 그다음에 기기 식별번호라고 그래서 IMEI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노출된 정보, 그러니까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 금융계좌 교란이랑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든가 OTP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 피해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군요. 지금 유출된 것은 유심의 고유식별번호와 관련된,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주로 유출이 됐고 그리고 개인이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라든지 혹은 카드번호 그리고 금융 사이트의 인증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되지 않았더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이동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것은 IMSI 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값, 2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에다가 공인인증서라든가 기타 정보를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것이지 통신사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유심에 저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출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참고인 김승주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 더 여쭙보면 방금 인증키가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인증키는 뭔가요?

○참고인 김승주 보통 휴대폰이 통신사에 물릴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식별번호, 그다음에 인증키—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다음에 기기 식별번호, 이 세 가지를 매칭시켜서 일치하는지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가입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입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게 2개만 유출됐기 때문에 유심은 복제될 수 있으나 휴대폰 단말기 기기는 복제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리고 SKT 유심보호서비스를 거의 90% 넘게 가입을 한 것으로, 2400만 명 넘게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복제폰이나 좀비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일단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기기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제폰을 개통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이것을 믿어도 된다는 거지요, 유심보호서비스를?

○참고인 김승주 예.

○박충권 위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불편,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로밍이 아직은 안 된다

든가……

○증인 유영상 14일이면 다……

○박충권 위원 14일이면 완료되나요?

○증인 유영상 예.

○박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유심만 갖고 가서 기기 다른 것을 사 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꾸려고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겠네요?

○참고인 김승주 기기변경 자체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편해지지요.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새 기기를 내가 쓸 수는 없지요, 그 유심을 가지고?

○참고인 김승주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없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 SKT를 포함해서 통신 3사 모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 점검이라든가 혹은 입법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참고인 김승주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거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통신사 해킹을 보는 것과고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동통신사를 해킹한다라고 했을 때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CDR 기록입니다. 콜 디테일 레코드(Call Detail Record)라고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랑 어디서 통화했다, 그 통화기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작년 말에 미국에서는 최소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도 해커가 노렸던 것은 CDR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출이 됐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금융 피해 쪽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은 조금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ISMS를 말씀하셨지만 ISMS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보안점검제도입니다. 모든 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특정 기업에 높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 기준 위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등 몇몇 나라들은 통신회사들에 관해서는 별도 법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액트(Telecommunications Security Act)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통신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을 한 150페이지 분량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총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충권 위원 통신사들을 위한 별도의 보안과 관련된 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참고인 김승주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아까 ISMS라고 하셨나요?

○참고인 김승주 그것 외에 훨씬 수준이 높은 통신사만을 위한 제도를 두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ISMS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해킹에 뚫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ISMS라고 하는 것은 보안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언급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ISMS 받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박충권 위원 권고받습니까?

SKT 유영상 사장님, 어떻습니까? ISMS에서 권고받는 것 이상의 보안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유영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류정환 부사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권 위원 예, 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주세요.

○증인 류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조건이 아니고 최소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보안시스템 수준으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악성코드나 해커들의 침투 수법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승주 해킹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나온 외국의 이동통신사 해킹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통 이동통신사를 공격하는 해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적으로 든든한 어떤 뒷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킹 시도도 보통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신사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두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해커들이 단순히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라기보다는 아주 거대한 어떤 세력의 후원을 받는, 어떤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대 해킹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승주 보통 해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유상임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큼 조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킹으로 복제폰이 만들어졌다거나 혹은 금융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어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피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총 여섯 번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빨리 끝마친 경우는 한 20일 또 시간이 걸린 경우는 한 세 달 정도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는 한 1~2개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우려하니까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에 발표할 일이 있으면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

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피해 사례는 없고.

지금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시면 한 몇 %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조사가?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지……

○증인 유상임 그 부분은 강 차관님 혹시……

○증인 강도현 일단 피해가 우려가 되는 서버들이 현재 3만 3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세 차례 조사를 했고 네 차례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지국까지, 하드웨어 서버까지 합치면 40만 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부분은 한번 중간 보고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척률을 전체 퍼센트로 확실히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차관님께 한번 다시 또 여쭙볼게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해킹 사건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약금 면제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징벌적인 페널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증인 강도현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에 대한 문제는 있었고 위약금의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의성실이나 고의·과실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과거에 2012년하고 2014년에 KT에서 한 1085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리고 2023년에 LG유플러스에서 또 한 29만 건 정도의 고객 정보 유출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증인 강도현 과징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증인 강도현 예.

○박충권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증인 강도현 그때는 위약금 문제보다는 손해배상하고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의 사건하고 이 사건들이 유사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제가 여쭙보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SKT가 해킹 당한 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좀 늦었지만 KISA와 개인정보위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이 된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강도현 여러 사례를 같이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건은 이 건대로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당시에 한 29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통화기록 같은 것들 한 3TB 정도가 해킹이 됐던 내부 문건이 다크웹에 올라왔어요. 당시에 중국의 아이순이라는 해커 조직이 해킹을 했는데 그 내부자가 이것

을 다크웹에다가 올렸어요, 이 3TB 정도 되는 정보를. 그래서 인지가 된 거지요, 해킹된 것이. 그때 당시에 과기부와 KISA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증인 강도현** 일단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유출된 내용들을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유출 정황 파악이…… 기업 자체가 유출 정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우리는 자료가 유출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증인 강도현** 원래 원칙대로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런 해킹 사고들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강도현** 강제조사 조항이 오히려 신고를 위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되 기본적으로 침해의 확산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권한과 내용이 좀 강화돼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당시에 KT하고 LG유플러스 사건을 보게 되면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서 한 수십억 정도까지 부과됐더라고요. 위약금 면제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증인 유상임** 위약금 문제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단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6년에 삼성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에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이고 이것은 이통사의 사례라고는 좀 다릅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벌적인 과징금이라든가 책임, 페널티가 부과게 되면 기업들이 자칫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커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하게 되면, 기업이 여기에 굴복해 갖고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우리 기업들이 해커들에게 아주 먹기 좋은 살쩍 먹잇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여쭙보는 거거든요.

○**증인 강도현** 위원님, 사실관계 조사와 이 사건에 대한 현황 조사에 다른 고려보다는 우선 해킹의 피해가 없는지, 감염 서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생이 없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것도 이따가 여쭙볼 거예요. 여쭙볼 건데 지금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여쭙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증인 유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조치하느라고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쭙보는 거거든요.

○**증인 유상임** 그런 우려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까지 하시지요.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 15분 드린 거예요, 간사와의 합의에 따라.

○**박충권 위원** 그러면 서면질의하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본 질의에 앞서서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왜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유영상 사장을 비롯한 SK 측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했어요.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말로만 얘기했지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을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5월 15일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AMCHAM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물론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시다.

아까 영상 안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때? 여전히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왜 최태원 회장은 이런 데 안 나오니까? 국회에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 얼굴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왜 이런 대형 사고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일부 소수의 재벌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영상 사장님,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등 4종의 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유영상** 개인정보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PPT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 나 항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인정하셨듯이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한시라도 빨리 유심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증인 류정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민수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뭐 기술적인 부분입니까, 그게?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유출된 정보로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유 사장님은 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막연한 두려움, 과도한 불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한민수 위원 좀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선거 때문에 이제 과방위도 열리지 않으면 그냥 덮고 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유심칩을 통한 신원 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유심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유심보호서비스와 FDS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체는 해 드리겠다고……

○한민수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4월 30일 청문회 때도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 유심 교체 물량 확보, SKT가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알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전체 유심 교체 고객이…… 이게 5월 6일 18시 기준인데 지금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물량이 있을 테니까. 맞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의 약 4%…… 96%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 유영상 유심 교체가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왜 회장은 나오지 않습니까?

유상임 장관님, 최태원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위약금 관련해서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30일에 유영상 사장 얘기, 종합적인 검토라는 계속된, 지속된 입장하고 똑같아요.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과기부가 이용약관에 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지요—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SKT가 지금처럼 저런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다면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법률 의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관께서 한 네 군데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증인 강도현 예, 세 군데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4월 30일에 로펌 세 곳에 갔고 5월 2일 날 한 군데 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강도현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전에 일단 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계



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다가 지금 청문회 직전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역시 도대체 어디에다 맡겼는지 자체까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내용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앓고 있는 거지요?

○**증인 유상임** 그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그쪽에서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한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이나 차관님의 그런 미온적인 답변이나 태도 때문에 과기부가 SKT에 유리한 쪽으로 법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증인 강도현** 위원님, 법무법인의 이름을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민수 위원** 그 내용도 그렇지요.

○**증인 강도현** 보다 중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향도 없이 그 의견을 달라는 거고 그걸 밝히는 순간 또 다른 설명이 있을 것……

○**한민수 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를 비공개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강도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설명을 와서 좀 해 주시고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도현** 저희 의뢰할 때 그런 내용이어서 제출을 이렇게 이름하고 하다 보니다……

○**한민수 위원** 유영상 대표님, SKT 책임과 피해에 대해서는 SKT가 지금 객관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 입장인 거지요?

○**증인 유영상**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실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이 즉각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아까 다른 위원님 때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만 시간이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유심 교체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 이것은 다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사과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면 기업 전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유심 포맷 관련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12일 출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기술……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기술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좌진으로부터 들었고 혹시나 유심 교체 때처럼 또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유심 포맷하려면 대리점을 직접 가야 됩니까?

○증인 류정환 예, 직접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 기술 새로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유심당 적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증인 류정환 지금 저희가 일반 유심은 15분 생각하고 있고요. 포맷 방식은 저희는 재 설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한 대리점, 직영 대리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 됩니까?

○증인 류정환 현재 2600개 대리점에서 똑같이 실시합니다.

○한민수 위원 2600개에서 10분씩, 그러면 대리점당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수는 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증인 류정환 현재 저희 케파가 20만~25만 정도인데요. 이걸로 하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기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심 포맷이 유심 교체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도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류정환 예,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재고적인 부담 쪽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가입자들,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분들, 지금 96%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할 때 전체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추정이 돼요?

○증인 류정환 현재로서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유심보호서비스처럼 일괄적으로 내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한민수 위원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점 갔는데, 이건 금방 해 줄 줄 알고 갔는데 이것 할 수 있는 분이 대리점에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10분이라는 것도 그냥 도상으로 계산해 보신 것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예,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상중 원장님, 지난 3일 KISA에서 SKT 서버에서 악성코드 8종이 새로 공개됐다, 발견됐다 공지한 것 맞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달 29일 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 때 그 4종과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이상중 그게 변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민수 위원 변종?

○증인 이상중 예.

○한민수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 매체의,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기존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SKT HSS 서버에서 발견됐다, 맞습니까?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맞아요?

○증인 이상중 예.

○한민수 위원 그래요. 맞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 서버는 뚫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SKT에서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 유영상 저는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에 의해서 저희는 따라갑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습니까?

장관님, 보니까 SKT 해킹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아까 김승주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르다고, 금융결제서비스 체제가 달라서……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금융 피해, 2차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많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정부나 SKT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80%가 넘습니다. 실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돼 버렸다 이런 슬픈 우스갯소리지요.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아까 유영상 사장님도 말씀했지만 한 25만 명이나 KT나 LG유플러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한민수 위원 과기부장관님, 그런데 지금 LG유플러스나 KT는 안전합니까?

○증인 유상임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CISO분들을 불러서 지금 감지되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를 전부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또 이것도 상당히 서버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보니까 이번 SKT 해킹에서 발견된 BPFDoor, 그 악성코드 아주 정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KT나 LG유플러스도 과연 안전한 건가 이런 우려가 또 생깁니다. 지금 자료 보면 LG유플러스나 KT로 옮긴, 여기도 지금 유심보호서비스가 열 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실제로 2년 전이었습니까, 3년 전에 다 아시겠습니까만 미국의 통신사 연쇄 해킹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악성코드를 심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집단이면 대한민국 통신 전체를 한번 교란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SKT가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한 시점이 4월 20일 16시 46분인데 과기부가 이 사실을 KISA로부터 보고받은 시간을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이나 차관님?

○**증인 유상임** 저희가 40시간 정도 후에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KISA로부터 보고받은 시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고는 다르기는 한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침해사고는 바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통신망 전반적인 보안조치, 점검을 하면서 신고체계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장관님이 KT나 LG유플러스도 잘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쪽 살펴보니깐. 장관님 말씀처럼 과기부에서 이통 3사 정보보호 책임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기부가 LG유플러스나 KT 보안 점검을 최초로 공식 요청한 시점이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침해사고 나고 한참 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잘 따져 보시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건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강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답답해서……

아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SKT랑 과기정통부가 혹시 같은 범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게 아니냐,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답하세요.

그거 맞지요,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말을 안 하려고 해서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핵심은 SKT가 해석을 의뢰한 범무법인과 과기부가 해석을 의뢰한 범무법인이 설마 같지는 않겠지요?

○**증인 강도현** 예, 의뢰할 때 이해충돌에 대한 걸 다 검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거 점검하셨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세요.

지금 SKT가 고객신뢰위원회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선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뒤에 또 청문회 열어서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끝나면 즉시 제가 과방위 내에 전문가 포함한 TF 구성해서 저희가 선거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그 전문가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각 방의 가장 조예 깊은 비서관으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전 통신사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KT나 LGT도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강제 가입시켜라, 특히 바텀업으로 해라, 디지털에서 소외된 분들 먼저 유심보호서비스 강제적으로 가입시켜라 지금 그 요구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유영상 대표님, 아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에 지난 4월 30일 날 ‘위약금 폐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렇

게 답변을 했어요? 4월 30일 날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위약금 폐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상 대표가 하신 말씀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정동영 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서 과기부가 들어가요?

○증인 유영상 과기정통부에서 법률 검토가 위약금 면제라고……

○정동영 위원 법률, 법률 그러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계약서는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증인 유영상 예.

○정동영 위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계약서, 계약서의 약관, 그 이상의 최고 규범이 없잖아요? 그건 국가의 헌법과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과기정통부에. 정통부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이 약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데, 과기부가 위약금 면제하라고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과기부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는 약관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유 장관님?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박정훈 위원님이 PPT 띄웠는데 43조 4항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면제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증인 유상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약관 지켜라 하면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관에 있으면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로펌 자문을 구하고 법률 검토가 안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상임 지금 이게 귀책사유가 있냐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무슨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소비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한 건데? 없잖아요? 소비자는 무죄잖아요?

○증인 유상임 소비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무죄예요. 무혐의예요. 날벼락 맞은 건데 그러면 사업자 귀책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관인 정부는 약관 지켜라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필 검토하는데요? 무슨 법의 된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약금 면제를 하라는 그런……

○정동영 위원 아니, 약관 지켜라 하면 되는 거지요. 위약금을 면제하라든지 말든지 간에 약관 맺었으면 그게 헌법인데 헌법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왜 못 합니까?

○증인 유상임 위원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동영 위원 단순하지 않아요?

○증인 유상임 예.

○정동영 위원 약관 신고만 받잖아요. 약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 접수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신고한 약관 지켜라 하면 되잖아요, 사업자한테.

○증인 유상임 글썄요,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동영 위원 면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단지 정통부는 약관을 신고받았을 뿐인데?

차관님 말씀하세요.

○증인 강도현 위원님, 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건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강도현 예, 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증인 강도현 예, 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동영 위원 SKT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유영상 대표님, 위약금 면제는 시혜가 아니잖아요. 귀책이 명백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조치인데 지금 SKT는 번호이동 또는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고지서를 날리고 있어요. 지금 25만 명이 번호이동했다고 그러는데 위약금 고지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증인 유영상 그중의 일부는 위약금……

○정동영 위원 일부가 몇 명입니까? 25만 명이 지금 번호이동 내지는 해지를 했는데 위약금 내라 하고 고지서 보낸 게 몇 명이에요?

○증인 유영상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동영 위원 담당자가 대답해 보세요.

25만 명 중에 몇 명에게 지금 위약금 고지서 보냈습니까? 실무자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거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언론 보도에 위약금 면제하면 500만 명, 250만 명이 빠져나간다, 매출액 7조가 손해다 이런 것만 뜨는데 아까 이훈기 위원 질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0만 명, 10배, 지금까지 나간 25만 명에서 250만 명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위약금은 25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위약금 2500억 손해예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부담이라면 저는 SKT가 2500억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7조가 어떻다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250만 명 빠져나가면 위약금 2500억 맞잖아요.

○증인 유영상 최소 250만 명이고 저희는 최대 50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약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정동영 위원 매출 얘기가 아니고 위약금 면제로 해서 발생하는 건 2500억이니깐 앞으로 2500억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그로 인한 매출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손실이.

○정동영 위원 그렇게 과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정보보호, 정보보안의 주무 관서가 어디입니까?

○증인 유상임 정보보안의 관서는 저희도 이통사와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입니다. 또 관련된 게 개보위도 있고요.

○정동영 위원 예산을 주로 쓰는 기관이 어디예요?

- 증인 유상임 예?
- 정동영 위원 예산을 주로 쓰는 기관은 KISA지요?
-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 정동영 위원 KISA 원장님, KISA는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이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문 이름은 뭐지요, KISA?
- 증인 이상중 코리아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입니다.
- 정동영 위원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 증인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원입니다.
- 정동영 위원 한국정보보호원.
- 증인 이상중 예.
- 정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KISA의 한글 이름은 뭐지요?
- 증인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 정동영 위원 인터넷진흥원이지요?
- 증인 이상중 예.
- 정동영 위원 안 맞아요. 인터넷진흥원하고 KISA하고,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어떻게 인터넷진흥원입니까? 이것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이상중 예, 안 그래도……
- 정동영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SA,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인데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통한다 말이에요. 명함 들고 다녀요. 이것 아니잖아요?
- 증인 유상임 예, 조금 영문하고는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영문이 정확한가요, 한글이 정확한가요?
- 증인 유상임 한글이 정확한……
- 정동영 위원 한글이 정확해요? 인터넷진흥원이 정확합니까?
- 올해 KISA 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이상중 원장님?
- 증인 이상중 올해 다 합쳐 가지고 한 3000억 정도……
- 정동영 위원 작년에 3100억이지요?
- 증인 이상중 예.
- 정동영 위원 인건비 빼고 사업비 2300억, 작년에?
- 증인 이상중 예.
- 정동영 위원 2300억 중에 정보보호 예산이 몇 %예요?
- 증인 이상중 한 600……
- 정동영 위원 토달 1300억, 65%가 정보보안·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의 3분의 2를 정보보호·보안에 쓰는 기관이 인터넷진흥원, 말이 안 맞잖아요. 이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 그다음에 비전문가라고, 지난번에 내가 유심 뜻이 뭐냐고 물어봐서 좀 머뭇거리셨는데 해킹 뜻은 압니까? 해킹은 뭐예요?
- 증인 이상중 해킹은 해킹입니다.
- 정동영 위원 아니, 우리말로, 한글로.

○증인 이상중 침해입니다, 침해.

○정동영 위원 침입?

○증인 이상중 예.

○정동영 위원 그냥 해킹이 침입이예요?

○증인 이상중 침해하는 겁니다.

○증인 유상임 침해합니다.

○정동영 위원 침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단 접근 그다음에 조작입니다, 무단 접근 조작. 그리고 데이터를 빼내거나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 그게 해킹이예요.

해킹을 담당하는 부서, 돈 쓰는 부서가 어디예요?

○증인 이상중 침해대응본부입니다.

○정동영 위원 KISA지요? KISA 안에 있는 거지요?

○증인 이상중 예.

○정동영 위원 혹시, 이걸 전문적인 거니까 모를 수 있어요.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들어 보셨어요?

○증인 이상중 예, 들어 봤습니다.

○정동영 위원 트렌드 마이크로 들어 보셨지요?

○증인 이상중 예.

○정동영 위원 무슨 회사지요?

○증인 이상중 보안업체입니다.

○정동영 위원 어디요?

○증인 이상중 클라우드 보안을 주로 담당하는……

○정동영 위원 어느 나라?

○증인 이상중 미국 업체입니다.

○정동영 위원 미국의 제1 보안업체인데요. 지난 4월 14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 최근 한국·홍콩·이집트 등의 통신·금융·소매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관찰됐다 이랬어요. 그리고 4월 18일 날 SKT의 백도어 해킹이 보고됐는데요.

민관합동조사에서 SKT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BPFDoor라고 발표했어요. BPF는 뭐의 약자입니까?

○증인 이상중 그 약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 BPF는……

○정동영 위원 잘 몰라요?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뒤에 KISA의 전문가.

○증인 유상임 버클리 패킷 필터(Berkeley Packet Fil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사용자 시스템에 침투해서 악의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악성코드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영어가 뭐냐 물어보는 것은 제대로 업무 파악하고,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총사령관인데 그렇게 어렵어름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1년 2개월 전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아이순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가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인도·베트남 등 최소 20개국의 정부와 기업을 해킹해 기밀을 수집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그때 과기정통부 그리고 KISA, 국정원



이 이것을 분석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밝혀 내겠다 이런 보도가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났단 말이에요.

1년 동안 KISA가 조사한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실무자 나와 있어요? 아이순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입니다.

아이순과 관련된 정보가 일단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찾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순 측에서 우리 국내 통신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KISA의 조사는 종료됐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현재는 더 이상 그 이후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종료됐으면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을 상임위에 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저희가……

○**정동영 위원** 국정감사 때도 얘기 없었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저희가 그 이후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없었고요.

○**정동영 위원** KISA는 됐고.

그다음에 강도현 차관님, 정통부에서도 그것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이순 그 보도가 좀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가?

○**증인 강도현** 보도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ISA가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

○**정동영 위원** KISA만 했어요? 정통부가 따로 뭐 TF나……

○**증인 강도현** KISA하고 저희들 같이한 겁니다. 그리고 KISA가 했던 결과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정동영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이동통신사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백도어, 뒷문 악성코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24년 9월 미국에서 9개 주요 통신사가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나서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부와 보안업체들이 협력해서 대대적으로 해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공격을 차단하는 조치에 돌입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이번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고 규정하고 과기부, KISA, 국정원 등이 총동원돼서 악성코드 전수조사와 보완과 보안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어제부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또 해킹 침해가 나오면 상당한 사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남·울릉군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지금 고려대학교에 계시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이상휘 위원 안보·보안 전문가시고?

○참고인 김승주 예.

○이상휘 위원 얼마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셨더라고요.

○참고인 김승주 예.

○이상휘 위원 제가 방송을 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들어가면 피해 예방을, 막을 수 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까?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금전적으로 내 돈이 빠져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까지 가입을 한다면, 기기 변경하는 것 자체는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보안 정도를 누리실 겁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해외 나가는 분들은 로밍서비스 이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참고인 김승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밍서비스와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분이 유심을 원활하게 교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었지요.

○이상휘 위원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으로 들어와야 유심칩이……

○참고인 김승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대책일 겁니다.

하나가 이상징후탐지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유심보호서비스가 하나 있을 텐데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보호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이상징후탐지시스템만 그분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방송을 우연하게 듣다가 전문가시니까 말에 신뢰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유 사장님, 해외 로밍하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래서 로밍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휘 위원 얼마……

○증인 유영상 일평균 적게는 1만 분에서 최대 2만 분까지 교체를 해 드렸는데……

○이상휘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증인 유영상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최대한 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12일 날 해외까지 보장해 주는 유심보호서비스 2.0 기술이 출시가 되면 그것을……

○이상휘 위원 이게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12일 날 될 겁니다.

○이상휘 위원 12일 날 됩니까?

○증인 유영상 14일 날까지 이제……

○이상휘 위원 14일 날 2.0이 된다?

○증인 유영상 14일 날까지 다 가입을 해 드릴 겁니다.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박충권 위원님 질의할 때 참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 분야는 잘 몰라요. 방송은 좀 알아도 이 분야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하시고……

유럽 쪽에서 이야기하는, 통신사에 문제가 있을 때 자체 제재하는 법안이 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10% 매출액의 과징금도 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최대치입니다.

○이상휘 위원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 도 그렇고 ISMS 인증을 받는데도 왜 뚫리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ISMS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최소한의 보안 요구 조건을 지켰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기업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플러스알파적인 요소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킹 동향을 보니까 중국발 해킹 그룹이 이동통신사를 노려서 해킹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

○참고인 김승주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액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서는 이동통신사가 지켜야 될 갖가지 항목을 굉장히 조밀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상휘 위원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유럽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휘 위원 유럽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참고인 김승주 유럽 전반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영국의 케이스고요. 영국은 2021년도에 법안을 만들었고요.

○이상휘 위원 얼마 안 됐군요?

○참고인 김승주 예, 2022년에 상세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교수님 보시기에 이 법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승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위원** SKT 유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법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증인 유영상** 정부에서 하시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교수님, 이 법이 되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 옷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지 않듯이 그래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체계도?

○**참고인 김승주** 저는 법의 현실의 문제보다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 회사를, 통신 인프라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무 부처 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상휘 위원** 따지고 보면 징벌적 피해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상휘 위원** 더군다나 통신사가 SKT, LG유플러스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간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 또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사회적 기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유럽에 통신사 자체의 별도 법안이 있다는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 참 와닿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주무 부처 체계를 어떻게 잡아 갈 거냐.

○**이상휘 위원** 구체적으로 주무 체계라는 게……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과 안보실 그리고……

○**이상휘 위원** 이원화되어 있지요?

○**참고인 김승주**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금융위 뭐 이런 식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 체계라는 것이 거기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참고인 김승주**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공고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악성코드가 발견됐을 때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국토안보부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전 부처에 그것을 알리도록 돼 있고요.

○**이상휘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거지요? 국정원하고……

○**참고인 김승주** 우리는 일단 민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이상휘 위원** 민간 쪽은 과기정통부, 국방 쪽은 국정원……

○**참고인 김승주** 국방 쪽은 군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영역을 국가정보원이 합니다. 그리고 총컨트롤타워는 안보실입니다.

○**이상휘 위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김승주**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처에 보고를 해서 그게 전체 전파되도록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사를 들어갈 때 어디가 관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일종의 관할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법적인 충돌이 없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 그러면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방기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인데 기업이 그만큼 책무를 가져야 되겠지요.

유 사장님, 지금 SKT의 직영대리점이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직영대리점이라 하면, 저희 자회사가 직영대리점인데 그게 한 350개 정도 있고요.

○**이상휘 위원** 350개.

그러면 대리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증인 유영상** 매장은 2600개입니다.

○**이상휘 위원** 2600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증인 유영상** 나머지는 판매점입니다.

○**이상휘 위원** 판매점까지 합치면 몇 개 정도입니까?

○**증인 유영상** 판매점은 1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통신 3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통신 3사를 다 다루고 있나요?

○**증인 유영상** 예, 다 다루시는 자영업자입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말씀을 왜 여쭙었느냐 하면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칩 서비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지금 어르신들한테 가서 유심칩을 이야기하면 유심초인 줄 알아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사실 그 정도로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이야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로당 숫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증인 유영상** 잘 모릅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 갖고 계신 다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면서 경로당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1만 개 넘는 판매점·대리점을 가지고 있는데…… 6만 8000개입니다. 그러면 그 6만 8000개, 판매점 구분을 다 해서 가지고 방문하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은 유심칩이 뭔지도 모르는데 길거리에 나와 줄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할 때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로당 숫자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해 보세요.

○증인 유영상 유심보호서비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어르신까지 다 했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숫자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다 올라오시라 그럴 겁니까? 가서 해야지요, 가서. 그게 고객들한테 기업의 예의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상취 위원 25만 명 이탈하셨다 했지요?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상취 위원 25만 명, 아까 말씀하시기에 어림잡아 10만 원 정도 하면 2500억 정도 피해지요?

기업에는 직접손실이 있고 간접손실이 있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손실이 2500억이라는 겁니까?

○증인 유영상 아까 1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취 위원 1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명 정도?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입자 이탈 숫자가 줄어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이가?

○증인 유영상 이탈 숫자는, 연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추세가 정체돼 있다 이거지요?

○증인 유영상 이탈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취 위원 아까 어떤 근거로 7조 원 정도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셨지요?

○증인 유영상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이상취 위원 그건 직접손실 아니잖아요.

○증인 유영상 그건 간접손실……

○이상취 위원 간접손실이지요.

○증인 유영상 직접손실은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입니다.

○이상취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직접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최태원 회장이 안보에 대한 부분이게 국방 전체, 나라의 문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적했듯이 프레임 전환이라고 봐요. 약관에 보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쩌면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왜? 귀책사유가 분명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프레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SKT가 이런 큰 중대한 사건을 일으켜 놓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안진다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조 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언뜻 들으면

‘아, 이것 참 큰일 났구나. 징벌적 피해보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간접·직접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자 그러면 2500억 정도 직접손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건 고객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서 해 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간접손실 다 마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유지 계속할 수 있고. 그게 기업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약은 피를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머리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우생마사라는 말 아십니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얘기에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말은 자기 힘만 믿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지쳐서 힘이 빠져서 죽고요,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흘러 흘러 내려가다가 급기야 삽니다. 지금 SKT는 말이 죽는 형국이에요. 진솔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솔하게.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요, 우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생.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최태원 회장님 이야기 쪽 들어 보니까 참 실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로당 개수도 모르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어르신 모시고 서울에서 다 유심 교환해 드릴 겁니까? 적어도 마을 방문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나와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만드신다 그랬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상휘 위원 구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유영상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고객분하고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고객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무엇을 공통스러워하시는지, 어떠한 불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걸 저희만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기획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냥 애드벌룬 띄우듯이 하지 마시고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만드시면 좀 더 국민들한테 납득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납득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이나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 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냥 언 발에 오줌 뉘서 불 끄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SKT 해킹 사고,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부터 작성일 기준 오늘까지 고객의 요청으로 해지한 계약에 따라 발생된 위약금 수익이 얼마인지 제 질의 전까지 주십시오. 인지하셨습니다니까?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미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신 건데 이것도

주세요. 다시 전달해 드리세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유영상 SKT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님 사과문을 보면서 저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SK그룹이 어떤 회사입니까? AI 반도체칩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HBM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가 있는 곳 아닙니까? SK텔레콤도 AI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막 새로운 날개를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AI 강국 신화를 그려 나가야 할 대한민국 통신사 점유율 1위의 기업이 사과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적시에 마련조차 못 하고,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지요?

과방위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AI 진흥을 위한 추경예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시간들을 너무나도 허탈하게 만들었는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룹사가 어떻게 제대로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유영상** 고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유영상 사장님,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과 불출석사유서는 다 보셨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불출석사유서에 ‘현재 저와 SKT 전 임직원은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여 있고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는데 무슨 수습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슨 피해 방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넘게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룹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불안하시겠습니까? 저도 SK텔레콤 장기 고객인데 너무 답답합니다.

유영상 사장님, 위약금 면제가 고객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공식 입장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 일부 사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문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한테만 배상을 해 줄 수가 없으니 두 사람 다한테 배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합당한 시장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SK텔레콤의 진심이 어떻든 간에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합당한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매우 의문이 드는 해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고객 차별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통신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떤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 인식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SK텔레콤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SK텔레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해를 배상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방법이, 어떻게 배상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SK텔레콤이 입을 열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쓰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SK텔레콤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던 피해 배상이라는 단어, 1340글자의 그 사과문과 사유서 중에 있습니까? 배상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제가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없습니다.

그룹사 회장의 입장에서 아마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책 발표도 없이 사과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국민께서 수용할 수 있는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백척간두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쇄빙선이 되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면 SK그룹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도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말 국민께서 놀랄 만한 대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SK텔레콤이 피해에 대해서 100% 전부 다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약금 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느 고객이 SK텔레콤을 믿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말로 때우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SK텔레콤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 온 고객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께도 고객의 분노와 국민의 질타가 위중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고하십시오.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과점적 지위로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가 과연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습니다.

위기에는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SK그룹이 과연 AI 각축전 등의 미래 기술 패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룹인지 도마 위에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새기십시오. 그리고 위약금 면제 문제, 피해 배상 기준 등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상 SK 사장님, 이번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100%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회피만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손해배상 책임은 100% 지니까 SK텔레콤 잘하고 있다, 마치 고객들에게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남기려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 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해킹 사태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과실이 존재하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사장님도 국민 앞에서 이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사장님, 고객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후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고객신뢰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부와의 어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유심 정보 해킹하고 관련이 있으면 피해액 전부 그리고 100% 배상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유심 정보 해킹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증인 유영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고객 신뢰회복위원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말씀하신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증인 유영상** 여기서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유심 정보 해킹 관련해서 SK텔레콤의 피해신고센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고객신뢰회복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것은 100%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거군요.

○**증인 유영상** 지금 아직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구체적인 배상의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신지, 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T월드 메인화면 어디에서도 피해 신고는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말로는

배상해 주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온갖 범기술로 배상을 피해 가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액 수준인 300만 원 이하만 피해자에게 쥐어 주고 끝낼 생각은 아니십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가입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지금 아침부터 유심 오픈런에 나서고 있고 연휴 기간 공항에 줄지어 서 있고 유심을 바꿔야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하실 생각입니까?

○증인 유영상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사과는 사과고요, 배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유영상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검토를…… 아까 말씀하셨던 배상액 산정 기준과 함께 이 부분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배상하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대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대책만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러니 SK텔레콤의 대책들을 마케팅이라고 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SK텔레콤의 자세만 보면 위약금 면제만으로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가입자들의 정신적·시간적 피해 배상도 회피하면서 위약금 면제조차 안 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SK텔레콤 발표에 따르면 연휴 기간까지 유심 교체 인원은 100여만 명, 교체 예약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100만 명은 오픈런을 해서 겨우겨우 유심을 어떻게 교체를 한 것이고 성공을 했어요. 미션을 완수했는데 아직도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2000여만 명이 남아 있지요.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도 이미 일주일 전에 유심 교체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꾸러 오라는 통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증인 유영상 지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안내는 드렸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내 공지는 갔다, 죄송하다 이렇게? 참아 달라는 얘기신 거지요?

결국 오픈런이 아니면 유심도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심 교체는 한세월이고 100% 손해배상은 신뢰가 안 가고 위약금 면제는 하지도 않겠다고 하고, 그러면 SK텔레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SK텔레콤이 월요일부터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직영점과 대리점을 중심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직영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신규가입 중단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심 교체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리점들의 금전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게다가 잘못은 SK텔레콤 본사가 했는데 고객의 원성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의 대리점 점주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지난주에 대리점에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매장 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유심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난동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사에서 해당 대리점에 어떤 배상을 해 줬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본사 잘못으로 피해를 봤는데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SK텔레콤 발표를 보면 신규가입 중단으로 대리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 담당이 계속 소통하고 있다, 영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보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지요?

○증인 유영상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안에 대해서.

○황정아 위원 ‘준비 중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다.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준비 중이라는 말 한마디로 통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본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그것은 아닙니다.

○황정아 위원 영세업자들인 대리점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 생각이십니까? 그저 잘해 보겠다, 구체적인 기준과 배상 방안은 이제 마련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SK텔레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대리점협의회에서 SK텔레콤 측과 소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SK텔레콤에 직영점·대리점 공지 매뉴얼 등의 소통 현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리점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그 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배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리점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예.

○황정아 위원 저희 의원실에 따로 신속한 대책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위약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해킹 사고 이후에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번호이동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 희망하는 고객이 있는 한 위약금 면제는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T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백해진 거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특히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만 유출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 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오늘 나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중 잠정 결과예요. 이렇게 보면 SKT는 어찌 됐건 잘못된 거지요.

강도현 차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보위의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가 된 거예요, 백신이 없다는 것은? 쉽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증인 강도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위원 처음 들었어요?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가인 류정환 부사장님, 백신이 없었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닐 테고 왜 이렇게 됐지요?

○증인 류정환 일단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표준에도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안에 백신 대신에 다른 쪽으로 보안장치를 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뚫린 겁니다.

○신성범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증인 류정환 저희가……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부실 관리라든지 책임 문제라든지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제1등 통신사라는 이름만 거창했지 그동안에 돈 버는 데 재미를 들였지 소홀히 했구나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여론만 따라갈 경우에는 결국은 당신들 1년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니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귀책사유라는 표현 때문에 말들이 많습시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은 했을지언정 고의가 아니었고 어차피 해킹한 사람들이 사고를 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SKT도 잘못은 있지만 피해자 중의 하나이고 뭐 이렇게 본다면 귀책사유 문제는 쉽게 SKT가 100% 완벽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눈치 같은데……

아까 이사회에 두 번, 어떤 식으로 보고했어요, 유 사장님, 유영상 대표님?

○증인 유영상 이사회에는 아무래도 현 해킹 사태……

○신성범 위원 아니, 다른 것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위약금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 일반적인 여론 이런 압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예, 다 설명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사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유영상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고요, 사내이사가 3명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사들은?

○증인 유영상 대체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영진에 질책도 하시고 하셨지만 위약금 문제에 관한 한은 법적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신성범 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따져 볼게요. 이 위약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 위약금을 면제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처음 나온 금액이 7조 원이었어요. 이 추세대로 번호이동자들이 간다면 한 달 내 500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예, 최대 그렇게 봅니다.

○신성범 위원 최대?

○증인 유영상 예.

○신성범 위원 저는 추산을 했으리라고 보고 500만에 7조 원, 7조에 대해서는 아마 근거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게요. 500만에 7조 원 정도 예상한다, 이게 SKT라는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사회나 이쪽에서 판단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CEO의, 이사진들의 배임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률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려 요인입니까?

○증인 유영상 내외부의 법무 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개월 남았고 6개월 남았고 어떤 고객은 2년 남았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실제로 남아 있는 충성 고객들은 ‘나간 사람들은 위약금 받고 나는 뭐 해 주냐’ 이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게 다 있겠지요.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강도현 차관님, 몇 %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규명할 수 있나요?

○증인 강도현 퍼센트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신성범 위원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서 하고……

○증인 강도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SKT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더 알고자 했던 것인데 대전제는 SKT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봐요.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SKT의 몫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오랫동안 사업을 잘해 왔다는 사실은 정말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집단소송, 아시지요? 집단소송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테니까 회사가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층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산청·함양·거창·합천 다녀 보니까 대리점에 칠팔십 된 어르신들이 줄을 죽 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안하니까 서울·부산에 있는 아들딸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빨리 가서 칩 바꾸라’ 하니까 놀라가지고 다 줄을 길게 서 있다고.

SKT 가입자가 2500만이다 그러면 유 대표, 70대 이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증인 유영상 아까 말씀을 300만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320만 정도……

○신성범 위원 320만?

○증인 유영상 예.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2500만의 SKT 가입자 가운데 70세 이상 노령층을 320만으로 추정한다고……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취약, 디지털……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4월 18일 날 일 터지고 4월 24일쯤에야 취약계층 대상 직접 연락, 하여튼 간에 자체 연락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상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경로당 이야기라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대처가 필요하고.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행안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력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안내센터를 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은 대책에 안 들어갑니까?

○증인 유상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배움터나 스마트 경로당, 우체국 이런 곳을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유상임 예,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김승주 교수님, 오래 계셨는데 이번의 SKT 해킹, 침해 사고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뭐니까? LG유플러스나 KT도 다 나중에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시사점이 뭐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 뭘 점검해야 되지요? 뭘 고쳐야 됩니까?

○참고인 김승주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이동통신망 자체를 국가 인프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통신망의 보안 수준을 다른 기관보다는 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관련 입법활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범 위원 보안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참고인 김승주 예.

○신성범 위원 어느 법률까지, 이것은 못 보셨지요.

강도현 차관님,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유지되려면, 현실화되려면 어느어느 법안을 손을 봐야 돼요?

○**증인 강도현** 현재 방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김승주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것은……

○**신성범 위원** 정보통신방법……

○**증인 강도현** 통신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보통의 수위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점을, 별도 입법이 중요한 건지 여러 가지 기준에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를 같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영역에 대한 구분과 기준의 높이의 차이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까 전에 정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보통신방법에 의거해서 KISA 포함해서 과기부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안보 관련, 적어도 해킹 문제, 국가안보로는 최고기관이 국가안보실이고 사실은 또 헤드쿼터, 사령부 기능은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는 건데 정보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워낙 또 민감하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형국이 많은 건데.

김승주 교수님, 이것 전문가신가요? 이런 대응 체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체제는 문제가 없나요?

○**참고인 김승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통신망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국가정보원이 해외 악성코드라든가 침해사고가 발견되면 각 통신기관, 통신회사에다가 그 정보를 알려 주고 공유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4조를 보면 다음 각 목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자신들이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래 놓으니까 SKT는 일반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빠진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도 만들어 났어요. 국가정보원 가면 사이버침해센터인가,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참고인 김승주** NCSC라고 그래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는 실제 일 생기면 국정원은 쪽 빠져 버리는 이런 대응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증인 유상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성범 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증인 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동안 국정원과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거버넌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고, 그 전 단계로 국정원과 법률 해석 관련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같이 범정부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상당한 우려가 되는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해킹 문제를 먼저 예방할 수 있을지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김 교수님, 계속 여쭙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우리가 유심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폰을 못 만



들고 해외에 나가도 큰 문제 없다고 전문가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참고인 김승주 지금 현재로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못 쓰실 거고요. 그런데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서비스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고친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말이지요, 이게 가정 상황이긴 한데 유심 복제를 해서 복제폰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기존 금융 비밀번호, 카드번호 이런 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아니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성범 위원 왜 그렇지요?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유심에 공인인증서, 메시지 같은 것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휴대폰에 설치된 유심에 저장되는 것이지 이동통신사와 공유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유심 정보를 해킹당했다라고 그래서 가입자의 인증서 정보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범 위원 항간에는 보면 휴대폰의 내 메시지하고 에이닷 음성녹음 기록까지 탈취당할 수 있다—AI 개인비서 에이닷 있잖아요—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인 김승주 아니요, 없습니다. 에이닷 서비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해서 정보를 이동통신사로 보내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 단말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국정원과의 관계…… 국정원과 국토안보부는 위상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우리나라 국정원은 위상이 다르고 미국도 CIA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매우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다시 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왜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굉장한 경각심에서 생긴 건데 그렇게 단순 비교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더 꼼꼼히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는데, 다만 국정원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이 법제처에 유권해석 했다고 좀 아까 얘기하셨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유권해석 무엇을 했는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종면 위원 이상중 KISA 원장님, 지금 유심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이것까지 유출되면 폰 복제 못 막는 거지요?

○증인 이상중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민관합동조사단……

○노종면 위원 유출되면 못 막아요, 막아요?

○증인 이상중 유출되면……

○노종면 위원 못 막지요.

○증인 이상중 위험성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유출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지요?

○증인 이상중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유출은 없다 이것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상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종면 위원 이동근 본부장님 어디 계시지요?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KISA의 이동근 본부장님은 민관합동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분야 전문가시고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앞으로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전체 시스템에서 아직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면 위원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가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조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까 봐.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믿게 발언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님.

○증인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지금 이동근 본부장 말씀대로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하시나요?

○증인 유상임 예, 아직까지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므로 유심보호서비스가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심지어는 유심을 바꿔도 못 막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상 사장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 100% 안전합니까?

○증인 유영상 현재 상태는 100%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류정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노출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리스크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망에서는, SK텔레콤 망에서는 이것을 디텍트(detect)해서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후예요?

○증인 류정환 작년부터 우리가 기술개발에 들어갔고요. 지금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증인 류정환 5월 말이면 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미 해킹을 당했잖아요.

○증인 류정환 저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나올 경우에 책임진다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데요. 일단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노종면 위원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인 류정환 맞습니다. 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게 대비해야 고객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중 원장님, 지금 통신사들 유심 식별번호나 단말기 식별번호나 이런 것 저장하는 양태를 보니까 암호화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상중 지금 현재 유심 관련된 서버는 3사 다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만약에 암호화가 됐다면 이번 해킹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또는 해킹의 의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증인 이상중 그럴 수 있을……

○노종면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유심 식별번호는 보니까 모든 통신 3사가 다 암호화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유심 인증키 있잖아요, 비밀번호 격인. 그것은 유독 SKT만 암호화를 안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유심 비밀번호라도 암호화를 해 봤다면 해킹의 목적을, 의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증인 이상중 여러 가지 경우의 수야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종면 위원 이동근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셔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 비식별 처리했다면 해킹을 당했더라도 해커들이 좀 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하면 해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 3사 중에 한 곳을 털어야겠다, 그러면 SK텔레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암호를 안 풀어도 되는 유일한 통신사인데,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해커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대단한 비밀은 아니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상임 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보면 유심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그리고 유심 인증키 이런 것들을 일부는 암호화 했고 대부분 다 암호화 안 한 상태로 보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의무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파악하기로는 IMSI, 가입자 식별번호는 지금 이통사가 전부 암호화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이통사 공히 암호화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대신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이것 정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까지는 없는 겁니까? 유심 인증키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증인 유상임**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보다 유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상임** 예.

○**노종면 위원** 유영상 사장님, 왜 유심 인증키 암호화를 안 했지요?

○**증인 유영상** 제가 그것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증인 유영상**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른 통신사들은 다 하고 있어요. SK텔레콤만 안 해요.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데 지금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귀책사유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PPT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약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조 1항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있더라도, 여기에 책임이 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기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기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저 부분도 법무 검토에서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노종면 위원**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죽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심 인증키에 대한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통신 3사 중에서. 그리고 해커들의 타깃이 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소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그 부분……

○증인 류정환 제가……

○노종면 위원 사장님께 여쭙어봤습니다. 그 정도는 답을 하셔야지요.

○증인 유영상 예.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노종면 위원 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데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유심 교체 하루에 20만 개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증인 유영상 예.

○노종면 위원 최대치입니까, 평균치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때는 20만에서 25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종면 위원 20만 개 이상은 할 수 있다?

○증인 유영상 예.

○노종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약 석 달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더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는 새로 개발한 유심 포맷……

○노종면 위원 그것은 다시 여쭙어보겠습니다.

유심 포맷기술 빼고, 이게 유심 공급이 늦어지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잖아요. 차질 없다는 입장인가요?

○증인 유영상 유심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에요. 차질 있어요, 없어요?

○증인 유영상 차질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거기다가 유심 포맷기술까지 곧 개발되는 거예요.

유심 포맷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고객이 맡기고 전문가가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대리점 인력을 증원합니까?

○증인 유영상 저희 회사 인력들이 최대한……

○노종면 위원 본사 인력들이 대리점으로 파견됩니까?

○증인 유영상 자원봉사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노종면 위원 자원봉사가 어딴어요? 회사가 파견을 해야지요. 노동자들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혹사 당하면 안 되지요.

○증인 유영상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금……

○노종면 위원 아니, 파견하고 급여를 주셔야지요. 무슨 자발적이에요?

○증인 유영상 예, 급여는 당연히 줍니다.

○노종면 위원 대리점 숫자 늘립니까?

○증인 유영상 대리점 숫자는 지금 급하게 늘릴 수는……

○노종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이 개발돼도, 이게 새롭게 해 보는 거잖아요. 속도가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이 포맷기술을 상용화해서 대리점에서 하면 지금은 유심 교체에 1일 20만 개 정도, 20만 개에서 25만 개 정도를 예상

하고 계신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납니까? 50만 대, 폰 기준으로 하면?

○증인 유영상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좀 어느 정도요?

○증인 유영상 지금은 10분과 15분의 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리라이트기가, 라이트기가 필요한데 라이트기를 더 보급하고 인원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심을 교체하는 데 15분이 걸리면 포맷하는 데는 10분 걸린다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현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고객이 포맷이나 교체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증인 유영상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교체해 달라고 하면 포맷기술이 나와 봐야 속도 안 빨라지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그런데 포맷기술의 장점은, 지금 교체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 교체 이후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노종면 위원 교체 이후에 불편함이 많아요?

○증인 유영상 예, 공인인증서나 이런 불편함……

○노종면 위원 아, 이게 폰이 바뀌는 거니까.

○증인 유영상 예, 그런데 포맷기술은 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그것으로 고객 설득을 할 수 있겠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그런데 선택은 고객께서 하시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포맷프로그램, 포맷기술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원격으로 고객들이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직접 포맷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것은 류정환 센터장이……

○증인 류정환 예, 방법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언제……

○노종면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 류정환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유심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종면 위원 결국 또 그러면 대리점 가야 되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조기에 원격기술까지 개발돼야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여쭙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약금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이탈을 안 하게 할 필요성이 있

는 것 아닌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피해 고객들 대상으로 통신료 인하 등의 그런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중인가요?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적극 검토 중입니까?

○증인 유영상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할 때 이 한 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유심 교체 내지는 유심 포맷이 기일이 오래 걸리는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대 몇 달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견뎌 내는 분들은 피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증인 유영상 예.

○노종면 위원 그럴 경우에 통신료 감면 등의 보상책을 고려하신다면 이 유심 교체 기간에 비례해서 제공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매우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증인 유영상 예,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이번 건과 관련해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증인 이진숙 저희가 스팸이나 스미싱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스미싱은 직접 저희가 관여하는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아, 그래요? 방통위로 피해 신고가 온 게 없어요?

○증인 이진숙 저희가 피해 신고가 오면 과기부로 이첩을 해 줍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 신고가 와야 이첩을 할 것 아니에요?

○증인 이진숙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신고 접수한 건수가 있나요?

○증인 이진숙 저희가 현재까지는 유심 교체 불편 피해보상 또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PPT 띄워 주시지요.

그리고 질문을 그냥 유영상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증인 유영상 예.

○노종면 위원 지금 피해 당하신 분들, 특히나 유심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저런 문자 오면 링크 클릭 누를 수 있겠지요?

○증인 유영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보상해 주니까?

○증인 유영상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조심하셔라라는 그런 안내말씀을 드리는데……

○노종면 위원 안내문자 발송했어요?

○증인 유영상 전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증인 류정환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것은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방통위도 재난문자에 해당 안 돼서 발송을 안 했을 거고 지금 피해 사례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덜하고 계신데 SKT라도,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고객들한테 문자라도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상** 검토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류정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신다고 해 가지고.

○**노종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류정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류정환** 일단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습니다. 유심 키 말고 인증 쪽 키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경우를 해 가지고 방어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월 중순에……

○**노종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인증키 암호화 안 해서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인데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증인 류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증인 류정환** 아니,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경영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왜 부사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옆에 계신데?

○**증인 류정환** 아니, 기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기술은 얘기하실 필요 없다니깐요. 앞으로 막아야지요. 그 당위만 확인하면 되지 지금 ‘이러이러한 기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것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유관 부서에 보고하세요,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국민께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관리 소홀로 인한 경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것을 여쭙어봤는데 왜 부사장님이 나서십니까? 할 말이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릴게요.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안 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알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도록?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께서는 ‘4시까지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진숙** 예, 연락을 했는데, 방금 김현 위원이 ‘지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 간에는 지시를 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업무 처리 얘기하나요?

○**위원장 최민희**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의 관계예요.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임위원은 차관급이에요. 지금 위원장과 위원이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의사진행발언……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얘기하려고요, 말씀을 하셔서. 지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적어도 2500만 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있는 통신 대란 아닙니까. 재난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미국 갔다가 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4월 30일 날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말고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이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의 권한을 지금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안 오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침해, 권리 보호 그다음에 방송 기본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위원장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 있습니다. 오도록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진숙 위원장님.

○**증인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것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할 때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진숙**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김현 위원** 무슨 위원회 구조가 그렇습니까? 본인이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같은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렇고, 어쨌든 몰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현 위원** 아니, ‘몰랐다’, 거짓말입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몰랐다잖아요.

○**김현 위원** 아니, 모를 수 없어요, 신성범 위원님. 두둔할 것을 두둔하세요. 사무처장이 그러면 모르나, 그것도 보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처가 붕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출석하라고?

○**증인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기관증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안 나올 때, 지금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시지만 김태규 증인이 나와서 답변할 게 있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에게 출석하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진숙 예, 지금 연락 취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올 시간, 김태규 위원장이 지금 오는 데 막혀도 1시간 20분, 그때까지 저희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장관님, 일단 우리가 해킹이나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 보안하고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증인 유상임 전화를……

○최수진 위원 어디다 해야 될까요?

○증인 유상임 저희 그런 상황을 받는 데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최수진 위원 잘 모르시지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KISA 원장님,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증인 이상중 일단 우리 ‘보호나라’라고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118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118,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첩 신고는 112, 불났을 때 119, 해킹을 하면 118 맞잖아요?

○증인 이상중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118에 대해서 아는지 여러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거의 몰라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김승주 교수님 정도는 아셨을까요, 118. 그렇지요?

○참고인 김승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 전문가들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크게 느낀 것은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하철이고 어디고 이제는 붙여 놓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우리 옛날에 간첩 신고나 불난리 났을 때 다 붙여 놓고 있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저는 참 그것을 해야겠다. 지금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하나 깨달아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 42만 건이 신고가 됐고요, 21년에 40만 건, 22년에 30만 건, 23년에 2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5만 건이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해킹은 계속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주냐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너무 홍보가 안 됐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속수무책, 그것에 우리가 돼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말 맞지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증인 이상중 인식 제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졌어요.

상담센터 운영 인력이 도대체 얼마야 그랬더니 2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15만 건이 숫자가 줄어도 실제로 20명이 처리하기에는 저는 진짜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118인터넷상담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KISA 원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고 이런 피해들이 국민한테 가지 않고, 갇어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증인 이상중 예.

○최수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실제로 너무 불안에 떨다가도 여기에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오서 가지고 얘기하시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면 일단 안심은 돼 이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전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SKT가 그것에 대한 보안을 너무 안일하게 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1위 통신사가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유튜브와 거짓 선동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 유심 유출 관련해서 PPT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유심 바뀌도 위험하다’ 이런 PPT 보신 적 있으세요?

그다음에 ‘SKT에서 유심 해킹돼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뉴스를 보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심 스와핑(SIM swapping)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화번호를 통해서 실제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유심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증인 유상임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제재는 방통위, 방심위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증인 이진숙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이런 불법정보, 불법유해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일단 신고가 방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을 시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SKT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한번 보실래요?

유심 아주 비싸게 지금 팔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아까 노종면 위원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보면 스미싱 거기까지 또 확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114나 이런 데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

해서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SKT에서도 책임을 갖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2차, 3차 피해가 스미싱으로 다시 옮겨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단말기, 고객에 대한 고유전화번호나 이런 건 안 나갔다고 쳐도 실제로 거기 그 유심에서 빼서 그 사람한테 스미싱은 할 수, 본인……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스미싱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스미싱은 가능하지 않나.

○참고인 김승주 아니요, 유심 정보, 지금 그러니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는 스미싱을 할 수는 없고요.

○최수진 위원 스미싱 자체도 어렵다?

○참고인 김승주 예, 그냥 아까처럼 ‘유심을 교체하십시오’ 이런 어떤 가짜 문자를 내보낼 수는 있지만 유심 정보로 스미싱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과 이것은 세퍼레이션(seperation) 된 이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짜뉴스가 안 됐으면 좋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유심 해킹 정보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진짜 너무 요즘 와서 배후 세력이 있다, 부정선거까지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총선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즘 우리가 대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가짜뉴스들이 제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일로 이슈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법적인 조항들도 여러 가지를 막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가나 법률,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SKT인데 저는 유심조차 바꾸려 갈 시간도 없고 또 다행히 깔면 된다 그래서 안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앞서 계속 나왔지만 어떤 차별성의 문제에 분명히 이를 수 있고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25만 개 정도가 옮겨 가고 있잖아요, 25만 명이. 그런데 250만 명에 10만 원 하면 아까 2500억 정도가 되지만 위약금이라는 게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단 말이에요,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요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얼마나 될까 뽑아 보면 많게는 몇조 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 몇천 억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ICT나 AI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할 돈을 늘리고 기업, 정부 다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기업 생태계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사실 국민의 한 명으로

서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24년에 1억 명 고객의 기록이 AT&T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개네들은 어떻게 이 보상 처리를 했을까? 보니까 유료 보안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저희가, 어쨌든 지금 SKT는 많은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충성 고객이나 정말 로열티를 높이는 일이 기업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위약금 줘 가지고 빠져나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 잘 해결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어떤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든가 고객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사례에 충분히 이런 게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유영상** 미국 사례, 유료 보안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사례를 검토했구요. 그제 아마 맥아피(McAfee) 같은 그런 백신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유사한 것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 백신 같은 것은 저희 나라의 경우는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혹시 고객들이 진짜 필요한 게 있는지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유심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아까 디지털 취약계층들한테는 미리 다 보호 조치도, 막아 주고 유심도 처리해 주는 방안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쭙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유심 부족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심 교체하는 개파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 예약을 해서, 왜냐하면…… 아니면 그냥 전체 너무 많이 몰려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해서 안내를 드리면 오시고 그래서 교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물을 세팅해 놓고 또 우편으로 해서 혜택을 해 드리면 사실은 또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문제 있으면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어쨌든 지금 문제가 이 과정에서, 교체 과정에서 또 대 혼란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겠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대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미 만드셨어야 되고, 저는 계속 늦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유영상** 지금은 돼 있습니다만……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것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류정환 부사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반티 VPN을 보통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에서 90% 이상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SK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증인 류정환 예.

○최수진 위원 이것에 대한 취약점이 있지 않나요?

○증인 류정환 취약점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침해사고가 발생되기 전인 4월 16일 자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시키고 격리시키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트레이싱(tracing)을 했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안 조치가 그 전에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증인 류정환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반티 장비에 있어서는 계속 최신 패치를 깔아서 했었고요. 4월 16일 자 나온 정보에 더 이상 조치가 안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파워 오프하고 격리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신규 장비는 팬찮고요.

○최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문제는?

○증인 류정환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밝혀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최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악성코드 8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그것 저희 팀에서 다 뒤진 거예요, 실제로. 그게 SKT에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였거든요.

왜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지 않나요? 어떻게 조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오픈하거나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증인 류정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합동, 민관 합조단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단 발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오늘 개보위에서 지적했잖아요, 실제로 백신 안 깔았다. 여기만 안 깔 거예요, 다 안 깔 거예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신을 SKT만 안 깔 게 맞아요?

○증인 류정환 다른 회사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깔려는 계획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심한 공격이 있어 가지고, 백신 문제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까는 과정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 사건하고 잘 맞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이것도 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 유영상 제가 보고받기에는 ‘백신이 전체 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디베이트(debate)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사태가 나면서 그때 백신 때문에 전체 장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수진 위원 하여튼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아직도 백신을……

○위원장 최민희 거기까지 하시지요. 그 질의응답 내용 진짜…… 거기까지 하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구갑 박민규입니다.

유영상 대표님, 사고 발생된 지 한 20일 지났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민규 위원 초기에 인지하고 나서 이틀 뒤에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서 누장 신고 했고 그리고도 이틀 뒤에나 보도자료 배포한 누장 신고 및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청문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책하셨으니 저는 그 이후에 SK텔레콤의 지난 일주일간의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께서, 사실은 특별히 SK텔레콤의 어떤 의사결정에 이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룹의 얼굴이시니까 최태원 회장께서 대국민 사과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의미 있어 보이는 게 보안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약속하셨어요. 전문가들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유영상 대표님, 혹시 전문가는 주로 어떤 쪽이고 언제쯤 이 위원회 활동 시작해서 명단 공개하실 예정입니까?

○증인 유영상 어제 발표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언제쯤 발표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측하십니까?

○증인 유영상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실 그 안을 놓고 회의를 하고 빠르면 다음 주……

○박민규 위원 빠르게 하셔야지요.

○증인 유영상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빠르게 하셔야지요.

어쨌든 그룹의 얼굴이라는 분이 사과까지 하셨고 지금 대표이사님이나 모든 임직원들 다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제가 그 고통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안정보보호혁신위원회로 출범하겠다고만 하지, 그럴싸하게만 하지 막상 전문가들이 아니고 사측의 의견에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유인즉슨 비단 이걸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SK텔레콤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다섯 분에 사내이사 세 분 그리고 SK스퀘어 투자전문회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시지요, 텔레콤?

○증인 유영상 예.

○박민규 위원 사내이사 세 명에?

○증인 유영상 예.

○박민규 위원 사외이사 전문성 봤더니 한 분은 명문 사립대 전 총장, 한 분은 최근까지 전 금융위원장이었다가 최근에 아마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바뀌셨고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쪽 AI 전문가고 한 분은 카이스트 공학과 교수고 한 분은 명문 여대 경영학과 교수던데 이분들 중에 정말 텔레콤이라는 굴지의 국내 최고 회사에 정보보안 전문가는 있습니까? 이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도 없어요, 언저리도.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께서 보안정보보호혁신위원회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번 토요일 날 회의에서, 내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고 사측과 독립적인 국민의 편에서 또 어찌 보면 SK텔레콤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분석과 전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반드시 구성되기를 바라고 저 본 위원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SK텔레콤 관련해서 지난번 청문회 때 많이 지적됐는데 24시간 내 과기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어기신 것 알고 있지요?

○증인 유영상 예.

○박민규 위원 관련된 과징금은 과기부에서 잘 정확하게 법의 원칙을 지켜야지만 국내 통신기업들, 특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그저 본인 규모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이런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관님, 다시 한번…… 로펌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석보다도 과기정통부의 장관님과 임직원분들의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유상임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님.

○증인 이상중 예, 말씀하십시오.

○박민규 위원 원장님 되시기 전에 전직, 주로 공직자 어떤 쪽에서 일하셨지요?

○증인 이상중 저는 검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를 주로 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셨나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증인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검찰 출신 인사시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군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넷진흥원,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시큐리티 에이전시(security agency)인데 왜 진흥원이나. 이 부분은 정말로 원장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희 위원회도 같이 고민하고 과기정통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원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이 원장님?

○증인 이상중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민규 위원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여기 기관 첫 번째가 어느 기관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몇 년도?

○증인 이상중 2009년도에 3개 기관이 합쳐 가지고……



○박민규 위원 그 전에, 최초.

○증인 이상중 그 전에는 한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박민규 위원 맞습니다. 96년도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첫 번째 기관이 설립되고 9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별 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증인 이상중 예, 맞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 속에서 2009년도에 현재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란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 진흥을 국가기관에서, 현재 사업비가 작년도에 한 3000억 되시던데 진흥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진흥’이라는 기관의 이름, 괜히 혼란 갖지 마시고 사업 구조, 지금 인터넷에서 재무제표, 조직이나 쪽 보니까 주로 보호가 더 중요하시던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것…… 정보보안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더 육성하든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다고 보완하겠지만 진흥원 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더 관리 감독하거나 좀 더 진흥해야 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상중 작년에 국감 때도 정동영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때가 10월인데 지금이 5월입니다. 준비를 하셨으면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그 준비된 내용을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이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오전에 이해민 위원께서, 아까 최수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VPN 관련된 서버, 개별 서버에 해킹이 시도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딩 쪽에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보안을 더 철저히 한다는 이유로 각자 서버로 블로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굴지의 통신사도 해킹에 진짜 속수무책,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보안 관련된 전문가, 교수로서 우리나라 보안산업이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아주 훌륭한 선도적 엔지니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봤을 때 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여전히 영세하고 작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좀 더 육성이 되고 좀 더 SK텔레콤과 함께 연계돼서, 하다못해 SK텔레콤 자회사로…… 1년에 몇 조씩 수익 나면 보안회사 하나 키우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그런 의사결정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규제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왜 통신 관련해서,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솔루션,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일단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끊어 놓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AI하고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식으로 내

부망을 인터넷망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동되는 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장님은 폐쇄망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점점이란 건 존재하게 돼 있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 분리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거기에 맞춰서 좋은 보안 솔루션도 도입되고 이런 사고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민규 위원 저도 교수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데요.

강도현 차관님, 망 분리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도현 차관님 첫 직장이 정보통신부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만 지금 공직 생활 거의 30년 하신 거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왜 우리가 망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국가안보도 관련돼 있고 정보보호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접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망 분리 정책을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SK텔레콤 사태를 봤을 때 과기정보통신부도 이것 한번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 생각 갖고 계세요?

○증인 강도현 우선 망 분리 정책 개선에 대한 로드맵은 발표가 되어 있고, 금융 분야를 우선으로.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망 분리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차근차근하고 계시군요. 저는 조금 더 속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시장도 없고 그걸 운영할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선도 사례는 공공이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강도현 차관님 또 장관님,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마무리 정책 관련해서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영상 대표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SK텔레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고객들이고, 걱정하는 분들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디지털 취약계층들, 받을 동동 굴리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분의 피해자는 사실은 SK텔레콤의 임직원과 주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 오전에 이훈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약금을 10만 원씩만 지출하면…… 현재 한 3주 동안 25만 명 정도 이탈했다고 했고 10배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250만인데 2500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작년만 해도 SK텔레콤이 1조 8000억 순이익 보셨고 1/4분기만 해도 5900억 이익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그 고민을……

아까 발언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좀 부풀려서 얘기하셨지요. 저는 이것 대표이사님이 국회 와서 하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지난 3주 동안 25만 명이 이탈했는데 한

달에 맥시멈 이탈하면 한 500만 기준으로 3년간 7조 원 손실 난다? 저는 이것 약간 험박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얘기하세요? 당장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디베이팅(debating)이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SK텔레콤이 7조 원 손실 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주주들한테 안 미안합니까?

○증인 유영상 죄송합니다.

○박민규 위원 그것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국회, 공론장입니다.

○증인 유영상 최대치에 대해서 말씀……

○박민규 위원 최대치를 왜 얘기하니까, 지금? 500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객 돌려 올 생각을 해야지.

저는 대표이사님, 이걸 정말 큰 실수 하셨다고 봐요.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는데요. 연합뉴스가 따 쓰니까…… ‘SK텔레콤 향후 3년간 7조 원 손실’ 이렇게 언론이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팀 자신 있습니까?

저는 SK텔레콤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할, 그렇게 홍보팀 관련된…… 그럴 시간 아껴서 아까 이상휘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좀 더 유심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알려 드리고, 아까 KBS 뉴스도 관련해서…… 결국에 스미싱에 관련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던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지 국회에 오서 가지고 그렇게 맥시멈의 맥시멈, 가정의 가정…… 전제로 얘기 안 하신다고 답변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가정의 가정에 대한,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매우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텔레콤 이번 사건으로서 계속적인, 눈덩이처럼 불신과…… SK텔레콤 관계자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매우 고생하셨겠지요. 유영상 대표님, 앞으로도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유영상 예.

○박민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일단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차관님.

○증인 강도현 예, 위원님.

○김우영 위원 2016년도 그때도 정통부에 계셨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를 교환할 때 위약금 면제 처분을 했어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증인 강도현 예, 발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위약금을 면제한 것은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지요?

○**증인 강도현** 소비자 책임 없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의 그 영상을 보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장님, 소비자가 지금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까?

○**증인 유영상** 지금 복제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심 복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증인 유영상** 입증 책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신고하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단순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였다는 얘기지요?

○**증인 유영상**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다음 영상.

(영상자료 상영)

저기에 차관님의 대사가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라는 그 단어를 빼셨어요.

○**증인 강도현** 제가 화면이 그래서…… 음성만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화면 다시 한번 띄우세요.

회사라는 말을 굳이 왜 빼셨습니까?

○**증인 강도현**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귀책사유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회사에 대한 어떤 피해가 돌아갈까 봐 정보통신부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증인 강도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어떠한 사정 없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전에 4월 30일 날 법사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SK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SK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는다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유상임** 그때 질문의 의도가 박 위원님께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느냐, 그것이 과태료 3000만 원 이런 건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회사는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조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전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SKT의 주식이 좀 내려가고 하면서 이미 1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추정들을 이미 했고요, 언론에서. 그런 차원에서 며칠이 더 지나서 그런 염려를, 그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제가 SKT를 옹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있지를 않고 회사는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김우영 위원** 장관님과 방통위원장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 단말기 유통거래에 관한 법률 등등 정부의 부처를 대표해서 이용자의 주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증인 이진숙** 예.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물론 또 기업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잘되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지만 기업이 공급한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부는 소비자 이익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두 분 다 말씀……

○증인 이진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유상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SKT라는 이통사가 민간으로서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다음.

SK텔레콤 사장님, 최태원 회장이 오늘 증인 출석을 안 하시고 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관련 행사에 참여하셨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우영 위원 그다음 사진이요.

안타깝게도 최태원 회장님은 2003년 또 2012년, 몇 차례에 걸쳐서 사법 당국에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우영 위원 특히 2015년도 8·15 때 사면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SK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들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알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증인 유영상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에 저희도 많은 비용을 그룹 차원에서 지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ESG경영도 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소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막대한 이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적 공익에 입각해서 기여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SKT 포함해서 SK그룹이 많이 강조한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위약금 관련해서 250만이 만약에 번호이동을 한다면 10만 원씩 해서 25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유영상 그게 직접 비용만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본인의 정보에 대한 어떤 스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귀책이 본 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한 보호 역할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적 공헌을 하는 마당인데 왜 소비자의 이익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위약금 문제를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증인 유명상** 이게 비용뿐만 아니라 좀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지금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태원 회장님이 아마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혹시 KSIA 원장님, 윤석열 검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한 적 있지요?

○**증인 이상중** 제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그때 사이버 포렌식 분석 관련해서 팀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증거에 입각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지요?

○**증인 이상중**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당연하지요,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아까 세 번에 걸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최태원 회장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12년 등등 구속된 사례를 보면 한국의 검찰 권력이 재벌 회장들도 잘못하면 집어넣는다 이런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2015년도 8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 복권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때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110억가량의 기부금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구속을 시키는 데 비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가? SK텔레콤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최기원 씨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지 하는 분이 세운 회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시드머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작년 계엄 발동 때 체포 수거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얼 말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래에도 대법관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개입을 해서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일으킨 사건인데 재벌, 검찰, 대법관 이런 막대한 대한민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담합을 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 권력과 재판권, 수사권 같은 걸 가지고 편을 먹고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그 시장경제가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하게 된 시장경제가 돌고 돌아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SK텔레콤 출범 당시에 그 돈은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이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입증됐다시피 합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면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출범 당시에서부터 국가의 공공이익을 어떻게 보면 사익화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환원하세요. 지금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그거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고 대통령 권력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뭘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당당하게 처신하고 또 시장에 돈을 벌어드주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게 기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노트7은 저렇게 피해를 끼쳤으면 자발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데 왜 SK텔레콤은 안 합니까, 피해액 규모나 크기도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권순일 대법관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최태원 회장 관련된, 소위 말해서 전에 제가 게시판에 올렸던,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 중의 하나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사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 편에 들어서서 판결을 했어요, 권순일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SK 자금이 들어간 화천대유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가고 50억 클럽에 또 들어갔어요. 이게 전형적인 권력 카르텔입니다. 거기 한 측면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검사가 있었고.

지금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소비자 권익 침해 건이 아니고 자본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재투자하고 그 보호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권력에 기대거나 권력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면서 말이지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사과로 이것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 최민희 끝나셨습니까?

○김우영 위원 예.

.....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앞에서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복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위약금 이런 문제였는데 SKT 해지하기를 원하면 절차상으로 화면에 뜨는 건데 ‘해지에 따른 약정 할인 반환금, 남은 할부금, 요금 정산 완료 후 해지됩니다’ 이런 게 뜹니다.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영상 사장님, 약정 할인 반환금, 남은 할부금 이게 번호 하나당 손실 추산액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약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말기를…… 그러니까 가입을 하실 때 단말기 할부를 받으실 때 그 지원금이 있거든요.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유영상 그 지원금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남은 지원금에 대해서 남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할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단말기 지원금을 원하지 않으시면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요금 할인을 25%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게 단통법에서는 거의 똑같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있으신 거고 할인을 받으신 분은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있으십니다. 동일한 겁니다.

○김장겸 위원 결국 요금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하고 동시에 받는 분은 없습니까?

○증인 유영상 할부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김장겸 위원 지원금. 동시에……

○증인 유영상 할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장겸 위원 할부는 다른 이야기……

○증인 유영상 예.

지원금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저희가 50만 원 지원금을 드리면 50만 원만 내시면 되는데 그것을 원샷에 내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열두 달에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단말기 할부금이고요. 지원금은 앞단에서 할인해 드리는, 단말기를 저희 비용으로 할인해 드리는……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 부분은 빼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단말기와 요금 약정하고 동시에 이렇게……

○증인 유영상 그건 둘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김장겸 위원 선택을 하는 거지 동시에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동시에 두 가지 다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 그런 말씀이군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단말기는 예를 들어서 SKT에서 번호를 바꾸고 LG나 KT에 가더라도……

○증인 유영상 가져가시면……

○김장겸 위원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SKT의 자산으로 잡히는……

○증인 유영상 아니지요. 단말기는 고객의 자산이고요. 단말기의……

○김장겸 위원 남은 금액. 헛갈리는데……

○증인 유영상 단말기에 대해서 할인을 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증인 유영상 위약금입니다.

○김장겸 위원 위약금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증인 유영상 50만 원, 1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금 SKT 입장은 그 위약금을 반환 없이 그냥 해지해 주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이런 말씀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증인 유영상 위약금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동하실 유인이 많아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영업액 그 추산하고 그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충은 이해하나 그렇게 해서……

아까 박민규 위원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해외 기업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티모바일 미국 이동통신사 여기가 7600만 명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니까 2년간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자에게도 5000원 상당의 음악 무제한서비스 1개월 무료이용권을 지급했고 이런 것을 유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이런 것을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유영상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 보면 고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이미 드러나 있고, 이것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래서 굳이 무슨 금전적 피해가 있어서 꼭 보상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노이로제에 걸린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대리점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리점도 여러 단계지요? 대리점, 직영점, 판매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아까 답할 때 지원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사실 대리점이 먹고사는 게 신규 고객 가입 그걸로 해서 먹고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그게 큼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거기 손실 부분을 지원하시겠다, 그렇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자 언론 보도를 보면 SKT대리점협의회 측이 밝힌 건데 ‘SKT 측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대리점의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핫라인 개설 등을 요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이것 혹시 보도 보셨어요?

○증인 유영상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것 어제 TV조선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지금 피해자, 소비자들도 소비자지만 소상공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리점분들의 고통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상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것 한번 챙겨 주시고.

상생 대책이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유영상 예.

○김장겸 위원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게 일종의 정부 행정명령이지요?

○증인 유상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행정지도입니까?

○증인 유상임 예.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것 SKT에 하신 거지만 주체는 대리점 업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이행해야 될 분들은……

○김장겸 위원 지금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은?

○증인 유상임 예.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 위기 상황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신분으로 대리점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유상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은 SKT 측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단지 이외에도 정부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더 지원할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앞서서 키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SKT가 장기간 저장·관리해 왔다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김승주 교수님, 사실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에서 이것 필수 보안항목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 키값이?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키값이 비밀번호같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만 보통 표준에서는 통신을 할 때는, 그러니까 IMSI값이나 K값을 전달할 때는 암호화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관할 때 암호화시켜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업체는 어떤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국내의 다른 업체는 인증키 K값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하는데 SKT만 그동안 소홀히 했군요. 아까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된 게 아직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참고인 김승주 표준에서 암호화해서 저장하라 이런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유출이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유출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혹시?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IMSI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이 두 가지는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본 바에는 유출된 게 확인됐고요.

○김장겸 위원 그래요?

○참고인 김승주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 안 됐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장겸 위원 통화 도용·도청 이런 게 유출에 의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해외 사례에서 나오는 건 국내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김장겸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 얘기하는 건 IMSI값하고 인증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유심 복제에 그치지 않고 단말기까지 전부 다 복제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문자메시지라든가 통화를 전부 다 가로챌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김장겸 위원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군요?

○참고인 김승주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 한 건 이상징후 탐지시스템을 고도화시켰고 그 다음에 단말기 유심보호서비스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장겸 위원 장관님, 이런 고위험 통신 데이터를 보호할 어떤 명확한 법적 기준 혹은 기술적 가이드라인 이런 게 수립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증인 유상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암호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은 좀 모호해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특히 개보위가 담당 소관 부서라서……

○김장겸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아까 기사 보니까 개보위가 내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에게 1차 통지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유 대표님, 관련 이야기 들었습니까?

○증인 유영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출 가입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영상 그러니까 유출이 의심된다고 지금……

그런데 그 보내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장관님, 그리고 아까 그 행정지도 말씀이지요, 사실 이 조치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이게 SKT 직영점하고 대리점 이런 데만 적용이 되고 일반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망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심 공급 부족, 유통망 분산, 인증 절차의 취약성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구멍이 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증인 유상임 SKT가 그렇게 우리 행정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바로 이것을 따를 텐데 다른 판매점은 또, 여러 통신사와 같이 판매점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일일이 거기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아마 SKT 측에서는 최대한, 유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종을 파는 것은 유심이 그쪽으로 쓰이는 거니까 도의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어서 아마 가급적 이 부분을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김장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이런 행정지도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제도적…… 지금 개보위, 과기부 분산되고 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여쭙본 것은 그런 차원에서 여쭙봤습니다.

○**증인 유상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정지도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PPT 3번 한번 보실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 대표님, 시간은 끝났지만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소비자원이 SKT에 발송한 유심대책 마련 요청 공문인데 이것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공문을 보냈는데 SKT가 공문을 보내서 답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메일로 하면서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다. 공문 회신은 어렵다’. 사실 공공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라면 높은 기관인데 이런 데서 보냈는데 이메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태를 그래도 여전히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일깨웁니다.

○**증인 유영상**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사유서에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다’,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방지 및 수습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출석해서 답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는 국민들의,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태원 회장 사과보다 중요한 배당조회서비스, SK 홈페이지에 보면 배당조회서비스 온라인 전환 안내가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기존 우편으로 제공되던 배당통지서를 온라인 배당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SK 배당조회서비스 바로 가기’ 이게 지금 SK 홈페이지고요. SK텔레콤 홈페이지에는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 전 사 차원에서 2500만 명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안 나온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K 유심 해킹 사고 이용하는 보수 유튜버들, PPT 띄워 주시지요.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유심칩으로 선거자금 마련하기 위해 해킹 사태가 발생했고 그 유심칩을 교체함으로써 선거명부를

만들고 또 중국에서 통제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 유심 나눠 주고 있다' 이 내용 혹시 방송통신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진숙 이 기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유튜버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테마주하고 연결 지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팀 있지요?

○증인 이진숙 있습니다.

○김현 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진숙 있습니다.

○김현 위원 3일 전에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지요?

○증인 이진숙 살펴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보수 유튜버들이 '이재명 땡큐', 조선비즈입니다. '주가 2배 뛰자 딱 45억 원어치만 주식 판 코나아이 대표' 이것도 허위조작정보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지요?

○증인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대통령 소속 기구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 고유업무 실종, 띄워 보시지요.

대리점 보호는 누가 하느냐는 지적을 앞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유영상 대표님?

○증인 유영상 정말 대리점 사장님들께, 대리점……

○김현 위원 대리점하고 판매점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대한 이용자이자 사업주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 유영상 저희가 유심 교체를 판매점에서는 무료 교체는, 그것까지 저희가 하게 할 수 없어서 2600개 대리점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 위원 2600개 중에 직영점 말고요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게 2300개 정도 되지요?

○증인 유영상 예.

○김현 위원 피해 상황 점검하시고요, 대응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과기부장관님, 디지털재난 관리를 통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24년도 7월 23일 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강도현 차관님, 개최했습니까?

○증인 유상임 개최를……

○증인 강도현 안 했습니다.

○증인 유상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의무 적용받아서 이행 중인 원년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SK텔레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의무를 적용받아 이행 중인 원년이다. 2024년도예요. 그러면 이것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적용되는 것이지요? 데이터센터가,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얘기하십시오, 강도현 차관님.

○**증인 강도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통신재난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문자서비스도 안 갔고.

그러니까 지난번 4월 30일 날 유영상 대표가 왔을 때 28일, 29일 날 MMS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2400만 명한테 다 간 게 얼마 걸렸습니까, 유영상 대표님?

○**증인 유영상** 제가……

○**김현 위원** 한 삼사 일 걸렸어요.

○**증인 유영상** 예.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에 대한, 통신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과기정통부가 있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SK텔레콤에서 위원회 만든다는데요, 그것 위원회 만들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열리면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 디지털재난 관리를 위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요.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려야지요. 왜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이 법사위 가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기업을 편드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상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김현 위원** 하십시오!

○**증인 유상임** 그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김현 위원** 질문한 것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리고요 방통위, 묻겠습니다.

방통위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방송통신재난심의위원회에 방통위도 참여하는 겁니다.

방통위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방통위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 이진숙**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김현 위원** 뭐 했습니까?

○**증인 이진숙**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김현 위원** 모니터링요?

○**증인 이진숙** 현장점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 현장점검 몇 명이 나갔습니까? 현장점검 몇 명 나갔습니까?

○**증인 이진숙** 시장조사과장을 비롯해서……

○김현 위원 2명 나갔지요?

○증인 이진숙 현장점검 했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은 갔다 오셨습니까? SK텔레콤 찾아가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 혹시 대책 강구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보냈습니까?

○증인 이진숙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책임자급에서? 안 갔지요?

○증인 이진숙 시장조사관, 국장급에서……

○김현 위원 안 갔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증인 이진숙 SKT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라는……

○김현 위원 잠깐만요. 멈추세요. 조용히 하세요.

○증인 이진숙 회의를 했습니다.

○김현 위원 가만히 계서 보세요.

질문이, 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급에서 갔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안 갔지요?

○증인 이진숙 예, 간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현 위원 안 갔지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그리고요 국장 갔습니까, 진짜? 6월 7일 과장급 직원 한두 명이 현장을 잠깐 둘러본 것이 전부였고 유심 해킹 관련해서 실질적 조치나 대응은 전혀 없이 돌아갔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입니다. 국장 갔습니까?

○증인 이진숙 4월 28일에 시장조사과장이 통신 3사를……

○김현 위원 아까 국장이 갔다면서요.

○증인 이진숙 통신 3사 관련자를 불러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현 위원 아니,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국장 나오세요.

○증인 이진숙 4월 29일에 국장이 SKT 임원을 불러서 시장 혼란 상황을 방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 위원 국장 나오시라고요.

지금 답변 끊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국장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담당 국장 나오시라고요.

국장은 네이버 시장조사 할 때 네이버 직접 갔지요, 현장조사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제가 현장에 간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부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담당 팀장하고 조사관들이……

○김현 위원 부릅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아니요.

○김현 위원 불러서 확인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담당 팀장하고 조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현 위원** 이것 SK텔레콤 현장을 과기부장관은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앉아서 불러서 확인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저희가 회의는 저희 사무실에서 했고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게 3사 불렀다는 얘기고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예, 그다음에 SKT……

○**김현 위원** SK텔레콤이 사건이 났는데 왜 3사를 부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SKT에 본인확인시스템 점검한 것은 또 다른 국에서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 건지 둘러보지 않은 거지요, 국장이?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저는 간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갔다고 얘기하셔서 가지고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SK텔레콤은……

○**김현 위원** 안 갔다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임원을 불러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현 위원** 불러서 대책회의 한 게 아니라 현장에 방문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과기부는 장관이 갔는데 방통위는 누가 갔는지를 묻는데 위원장이 국장이 갔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요? 안 갔지요?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한 거지요? 들어가세요.

○**증인 이진숙** 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속기록 확인할까요?

○**증인 이진숙** 확인하세요.

불러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장 혼란을 막으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현장점검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는 불러서 지금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뭐였습니까? 지금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을 굳이 부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4월 30일 날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유심보호서비스 강제가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강제가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유영상 대표님? 서비스잖아요.

○**증인 유영상** 저희 일괄 가입으로……

○**김현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잖아요.

○**증인 유영상** 자동가입으로……

○**김현 위원** 자동가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도 모르는 부위원장을 이것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했고요.

또 하나가……

○**증인 이진숙** 부위원장 7시 도착 예정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얘기가 나왔고 65세 이상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그거



라고 해서 상황 파악을 그사이에 하셨는지를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질문을 추가로 하겠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유심안심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요 사실은 2023년도에 LG 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쪽 보면 2023년도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SK가 초기에 대응이 이렇게 부실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2023년도 LG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한 달 반 동안 검토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정부와 회사가 마찬가지로 안일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안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법률 검토를 외부에다 맡겼다고 하시는데요, 장관님. 과기정통부 안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 없습니까? 이 문제를 외부에 의뢰를 해야지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과기정통부에 내부 변호사 몇 명입니까? 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 위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개방형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몇 명입니까?

○**증인 이진숙** 토달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월 2일 날 법률 검토를 외부에 의뢰했지요. 이런 것 왜 외부에 의뢰해야 됩니까,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나? 공무원들 안에 변호사들이 있고요. 똑 떨어지는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가지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의 변호사한테 돈을 들여서 자문을 구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전문성 없습니까,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유상임** 글썄요, 변호사하고 또 법무법인은 다른 거니까……

○**김현 위원** 아니, 법무법인의 변호사나 변호사나 이 문제는 약관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약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2016년도에 앞서 김우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번 띄워 보세요, 2016년도 PPT.

그때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맞지요, 강도현 차관? 아시지요, 2016년도에?

○**증인 강도현** 예, 위약금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위약금 면제해 주고, 위약금 안 받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3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쿠폰을 발행했어요, 보상을.

그래서 아까 10만 원 얘기하면서 3000억 얘기하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동이 될지를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고통, 먼저 선 해결하고 해결당하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한다, 국회도. 그러나 번호이동을 굳이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기정통부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검토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

법률 검토를 왜 외부에 의뢰합니까, 장관님? 그러면 로펌에서 구미에 맞춰서 SK텔레콤이 로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증인 유상임 아니요, 그런……

○김현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입장을 못 냅니까? 방통위도 마찬가지고요.

○증인 이진숙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 위원 아니, 변호사·검사도 파견 나와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법률 검토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첫 번째 시간 끌기, 두 번째는 곤란한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의뢰하는 주체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답변은 맞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16년도에 사건이 있었고 2018년도의 LG유플러스가 2023년도에 발견이 돼서 한 달 반 동안 조사를 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다 물렸어요. 그러면 2025년도의 SK텔레콤 이 사건이 LG유플러스보다 훨씬 심각하고 대상도 넓어요. 2500만 명이 잠재적 피해 대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해커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심안심서비스가 완벽하다? 모르는 겁니다. 왜냐? 구체적인 공격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나 회사에서 어떤 방침으로 할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청문회도 보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하지 않은 정부를 가지고 또는 무능한 정부와 그 회사가 어떤 방침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킹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증인 유상임 하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규……

.....  
○위원장 최민희 이따가 김태규 부위원장 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께 두 분 질의하실 겁니까?

○최형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면 김승주 교수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김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김태규 부위원장이 도착하는 7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서를 하신 증인들과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규**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증인 김태규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지금 SKT 유심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서 가입자 보상, 피해 대책 이런 것들을 주로 토론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SKT 해킹 침해사고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침투가 이루어졌고…… 부사장님이 잘 아시나요?

○**증인 강도현** 조사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어디까지 밝혀지고 언제쯤 이게 윤곽이 나오나요?

○**증인 강도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국가 단위의 해킹그룹 그래서 BPFDoor 계열 악성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증인 강도현** 자주 사용했던 그룹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픈소스가 돼서 아직 특징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게 통신사, 금융기관, 플랫폼, 온라인쇼핑몰같이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SKT가 유심관리 서버, HSS서버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침투되어 있었고 잠복해 있었다는 것을 보자면 지금 다른 데에서 유사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이걸 탐지 못 한 상황이 높다고 보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레드멘션, 솔트 타이폰, 아이순, 벽아이, 레드아폴로, 어스 블루크로 이런 조직들이 다 국가 단위의 해킹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징후들이 속속 많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지금처럼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T가 유심 정보가 해킹당했다라는 이 깜짝 놀랄 소식 때문에 이번에 정 말 국회에서 청문회도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변에서 이런 사태 들이 조금조금씩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PT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틀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글로벌 사이버 위협 분석 전문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 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우스코리아에서 2024년 6월에 통신사 텔레커뮤니케이션, 텔코 (Telco)에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SKT에서 트렌드마이크로가 발표하기 전에 이런 징후라든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있었습니까? 이건 물론 SK라는 특징은 없습니다만.

○증인 류정환 작년 10월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 정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런 발표랑 이런 리포트는 있지만 이것을 SKT의 내부에서 직 접 감지하거나 탐지할 만한 것은 아직 없었던 거지요?

○증인 류정환 예.

○최형두 위원 해킹 공격에 대한 여러 방면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SKT라는 국내 최대 기업, 세계적 규모의 텔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통신사로도 번질 수가 있 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기관 또 민간 사기업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제가 한번 죽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랑 함께 이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 다.

2024년 9월에 솔트 타이퐁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악명 높은 해킹그룹이 AT&T와 버라이즌 같은 미국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부와 정계 지도자들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데이터 같은 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사건인데 우리 국내 는 마치 먼 산 구경하듯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워싱턴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24년 건데요, 2024년 2월 아까 말씀드린 해킹그룹 중의 하나인 아이순의 내부자가 해킹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570여 개 파일이 그중에 노출됐는데 우리 한국 통신사의 콜 로그, 통화 기록 데 이터가 무려 3TB 유출된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런 피해 사실이나 이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 까, 차관님?

○증인 강도현 아까 답변드렸는데 KISA 중심으로 같이 조사를 했던 사례가……

○최형두 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증인 강도현 예.

○최형두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홍콩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에도 동시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무부 것 한번 볼까요. 미국 법무부에서는 아이순이라는 해킹그룹에서 미국 정부기관과 주의회뿐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외교부·언론사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 서버,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6일 미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이처럼 SKT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기업 차원의 대책, 피해자 보호, 유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글로벌 수준의 텔코인 SKT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것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런 해커들이 그냥 스미싱 이런 걸로 금융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아까 미국에서도 벌써 솔트 타이퐁이 미국 대통령 후보의 통화 기록 여기까지 접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일단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일반 조직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해 유출했던 과거의 해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커가 통신 네트워크에 침입해도 즉시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2차·3차 피해로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트 타이퐁 같은 거대 해킹조직의 대대적 공격에 개별 기업 대응으로는 제약이 큼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국회도 이 청문회를 계기로 범정부 또 범기업, 민간 합동의 큰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커조직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국가와 기업 간 조기경보시스템, 사고 대응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같은 것이 개발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민간과 공공영역 간에 사이버 침해 추세를 서로 공유하고 공격 패턴과 사례 등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관리하고 다중보안, 이상행위 탐지 같은 사전 예방 활동과 선제적인 대처 환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게 SK텔레콤 그 이후로 나온 신문들을 보고 한 겁니다.

국방부는 유심을 교체한다면 장병 외출을 보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주한미군들에게 유심을 교환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SKT 유심을 바꾸라고 전 부처에 권고를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좀 봐야겠다.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는, 칸막이로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아마도 KISA는 ‘KISA가 이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테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것 민간 분야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럴 테고 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그 부분은 KISA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칸막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좀 위태롭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우선 LG유플러스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는 알바몬 해킹도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가 2021년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도 정보보호 투자액이 매출액과 기업 규모에 비하면 867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워싱턴포스트에 났던 기사, 미 법무부의 보도자료다 공개된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사이버 보안회사의 보고서에 나타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전부 그때그때, 이게 우리 국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국회가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는 사이버 해킹 사태인데 9·11 테러 때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9·11 테러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정보기관은 그 징후조차 몰랐나를 조사했습니다. 해 봤더니 이게 죽 그겁니다. 뭐냐 하면 2000년 1월 2일 날 CIA가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언젠가는 FBI가 어딘가에서 알카에다의 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서 급습해서 잡을 뻔했어요. 그다음에 또 DIA라고 DIA는 우리 같으면 국군보안사, 국군정보사 같은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른 사람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노티파이(notify)하지 않았다, 인폼(inform)하지 않았다, 셰어(share)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알카에다가 미국 전역에 흔적을 남기고 테러를 하겠다는 징후를 곳곳에 뿌렸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관료사회의 칸막이 현상 때문인데.

그래서 9·11 커미션에서, 셉템버 일레븐 컨그레셔널 커미션(9/11 Congressional Commission)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칸막이를 극복하자. 왜 미국 정부는 그렇게 많은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정부 예산을 쓰고서도 실패했나. 그래서 9·11을 위해서 만든 게 통합적인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대응기구입니다. 그것이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는 기구입니다. 이 DNI가 나타났고.

또 통신 사이버 공격 사태에 곳곳이 노출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처나 또 그 기관이나 기업이나 모두 각각 파편화된 대응만 하고 있어서는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범정부적 노력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를 모아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곧 대선이 되는데 상당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라는 것이 국정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관군 합동대응팀인데, 어쨌든 지금 각 부처별로 좀 나누어져 있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통합하자라는 개념이기는 한데 한번 이것부터 좀 더 살펴보

고 부처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를 통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SKT 유심을 바꾸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그러면 이 사건을 조사했느냐? 그런데 신성범 위원장이 정보위원회이지만 사실 국가정보원은 이걸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증인 유상임 예, 이건 민간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과기부나 KISA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예방조치로 한다고 하면 공공 분야에서 예방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것이 미칠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또 기업에서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정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분산돼서 파편화돼서 나오는 공격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관, 부처, 회사별로 파편 대응해서 결국 막아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죽 보시겠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났어요. 났는데도 우리는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트 타이폰 사태가 나고 나서 미국 법무부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제정하고 미국 FCC는 미국의 텔코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규칙을 제안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에 SKT, 민간 텔코에도 해 줄 말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브라질에서 나온 2025년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Data Breach Investigation Report)입니다. 이 내용을 죽 한번 대충 훑어볼게요. 그냥 죽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어떤 유형으로 주로 침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어떻게 위험하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죽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특히 퍼블릭 섹터가 아주 위험하다는 이 보고서가 있었고,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퍼블릭 섹터가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털리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들, 기존에 사용된 시스템이 보안 패치가 전혀 안 돼 있다거나 백신이 없다거나 이런 상태로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이고 적절한 규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oT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에서 지금 자세한 보고가 나오는데 SKT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부사장님이 이 분야를 잘 아시지요?

○증인 류정환 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깊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혹시 머라이즌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전체 매출이나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증인 류정환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지금 SKT가 매출 규모에 비하면, 아까 얼마였지요? 팔백 얼마라고, 이미 언론에서도 그 규모가 너무 작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작게 하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사실 예고된 참사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작은 규모밖에 안 하지요, 여기는?

○증인 류정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저희가 투자를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SKT는 2000만이 넘는, 우리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가입한 통신사고 그만큼 신뢰가 높고 저 같은 경우도 3개 번호에 벌써 10여 년째 계속해서,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매출을 올려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가 부족하면 국민들이, SKT 가입자뿐 아니라 또 SKT에 의존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위태로워지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됐어요, 시간을?

○위원장 최민희 5분 더 드린 거예요.

○김현 위원 20분 하신 거예요?

○최형두 위원 안 하립니다. 김현 간사가 그냥 짧게 5분……

○김현 위원 아니……

○최형두 위원 그러면 더 할게요. 잠깐만……

○위원장 최민희 하시고 이따 또 하세요.

○최형두 위원 안 하립니다. 됐습니다. 좀 지루할 테고. 어쨌거나 저는 이 문제가……

○김현 위원 지루하다니요.

○최형두 위원 아니, 저쪽 공직자들이.

자세한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와 KISA 또 SK텔레콤이 최전방에 섰다, 국민 안보의 최전방에 섰다는 생각으로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스템도 바꾸고 또 국회에도 과감한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증인 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께 2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죄송합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질문한 내용을 지금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이.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해서 4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관심입니까, 주의입니까, 경계입니까, 심각 단계입니까? 무슨 우리가 매뉴얼이 없어서 장관님이 지금 저렇게 답변하는 것 그대로 듣고 계십니까?

○최형두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매뉴얼이 아니고 부처 간 협의라는 거예요.

○김현 위원 부처 간 협의도 다 매뉴얼 안에 있어요.

○최형두 위원 국정원은 개입 못 한다……

○김현 위원 장관은 도대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장관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 되는 얘기 합니까,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최형두 위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그렇게 다 털립니까?

○김현 위원 위기관리를 해야지요. 털린 뒤에 위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최형두 위원 남이 질문한 걸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김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없다고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이 상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증인 유상임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잠깐만 주세요. 질문……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것 아니고요.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 의사진행……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듣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확인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질문에 대해서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이 갔느냐는 질문이었고 그러면 누가 갔냐, 국장이 갔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러서 들었다 이렇게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 질문이 갔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굳이 그 질문을 안 받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사과받아 주세요.

도대체가, 아무리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나라가 엉터리라고 하지만 적어도 국민 세금을 받는 공직자가 내용 파악은 하고 답변할 때는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해요. 막 던져요, 그냥.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 이진숙 답변을 막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SK……

○위원장 최민희 좀 가만히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속기록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실, 갖다 주시고요.

김현 위원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질의 끝나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 거기서 본인이 잘못 발언한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녹취록을 보면? 그것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받든 뭐 하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께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

○김현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요. 있는데 여기에.....

○증인 유상임 지금 어느 매뉴얼을 말씀하시는가요?

○김현 위원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것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 또한 장관은 지금 저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이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저것 파일로 갖다 드리세요.

○김현 위원 지금 왔어요. 뒤에서 드렸다고.

○위원장 최민희 파일로 드렸습니까? 그것 보시고요.

장관에게 숙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께 할 터이니 그사이에 숙지하시고. 제 질의가 끝나면 김현 위원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충분히 안 주시고 정해진 시간만 주세요, 빨리 가게.

○김현 위원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최형두 위원 하루 종일 했잖아요.

○김현 위원 하루 종일..... 왜곡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얼마 안 했어요. 네 시간 했어요.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2시부터 했어요.

○최형두 위원 나는 하루 종일 했어요. 나는 아침부터 했어요.

○위원장 최민희 저 질의할게요.

○최형두 위원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저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강도현 차관, 지금 SKT 3개 서버가 감염됐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강도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아까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부터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셨나요, 그 부분은?

○증인 강도현 예,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어디까지 했어요?

○증인 강도현 일단은 3차에 걸쳐서 3만 3000대의 서버를 확인했고요.

○위원장 최민희 몇 프로 했어요? 그게 남은 것의 몇 프로예요?

○증인 강도현 3만 3000을 기준으로, 리눅스 기준으로 보면 다인데요.

○위원장 최민희 다 했어요?

○증인 강도현 다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세 번 돌렸는데 지금까지는 감염된 추가 감염 서버가 없습니까?

○증인 강도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 감염된 서버가 나왔습니까?

○증인 강도현 조금 더 있고요. 그 점들을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대목이에요, 추가 감염 서버가 있나 없나. 그런데 세 번 정도 돌렸을 때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징후가 있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증인 강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해야 되나요, 우리는?

○증인 강도현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감염 서버 그다음에 변종 악성코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SKT가 가지고 있는 서버, 14개였나요? 서버 중에 3개가 감염됐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지요? 그런데 추가 감염된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증인 강도현 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두 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지요?

부사장님, 왜 SKT만 유심 인증키 암호화하지 않았나요?

○증인 류정환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실행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늦었나요?

○증인 류정환 작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사건이 워낙 커 가지고요, 그때 하다가 검토가 좀 길어졌습니다, 진행 중이면서.

○위원장 최민희 아까부터 마이크로 그 얘기 계속하던데 거기는 인력이 1명밖에 없나요?

○증인 류정환 아닙니다. 저희 장비가 워낙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백신 작업을 하는데……

○위원장 최민희 돈은 얼마 드나요?

○증인 류정환 전체 투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유심 인증키 암호화하는 데……

○증인 류정환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 못 하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뭘 이따가 얘기해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증인 류정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했다면 불안이 덜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SKT만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그것을 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증인 류정환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빨리 확인해 주세요.

○증인 류정환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상중 원장님, 현재 유심 종류가 몇 개예요? 현재 사용되는 유심 종류가 몇 개입니까?

○증인 이상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위원장 최민희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진흥원장이시잖아요. 이것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래서 인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질문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일반 유심, 마이크로 유심, 나노 유심 이렇게 3개입니다.

저 뒤에 아까 기술본부장인가 누구 계시지 않았어요? 좀 나와 주시지요.

이렇게 유심이 나뉘지는 기준이 뭐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크기……

○위원장 최민희 기준이 뭐니까? 크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예, 크기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금 SKT가 무료로 나눠 주는 유심은 나노 유심 하나지요, SKT?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일반 유심과 마이크로 유심 쓰는 분들은 트레이 장착해야 되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트레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증인 류정환 SK텔레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누가 냈습니까? 방치됐지요? 사용자가 냈지요?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 모르시겠어요?

○증인 류정환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당장에 시정하시겠어요?

○증인 류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트레이 교체에 대하여 대리점에 지침 내리세요. 당장 내리세요.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부 대리점, 정말 선의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나중에 상 주세요. 그분들 때문에 나 SKT에 남아 있다 이런 고객들이 계십니다.

○증인 류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 유심보호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5월 14일까지. 그렇지요? 해외 로밍.

○증인 류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해외여행 간 분이 계십니다. 12일 동안 출장인지를 잰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밍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일 해외에 있는 동안 4일 정도 로밍서비스를 쓰게 된 거예요, SKT의 귀책사유로. 그런데 이분한테 12일 로밍 비용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안 챙기실 거예요?

○증인 유영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조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떡주세요, 1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너무 민감한 얘기가 나와서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의 법령해석요청서 이것 제가 다 봤는데요. 이런 것 왜 보냅니까, 법제처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민간 영역은 과기부가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령, 이거요 시행령도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이 해킹당했을 때 과기부가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 영역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정보원이 합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 영역은 국방부가 합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해요. 이것은 국방정보화법 제4조에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게 됐냐? 국가정보원이 월권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것 치워 주세요.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이 이 사태가 난 이후에 과기정통부에 통신사 침해사고 관련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 불법이에요, 이것 요청하는 게. 이럴 때 과기부는 불법이라 못 준다 하시면 돼요. SKT에도 요청이 갔어요.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안 줬잖아요, 법을 아시니까. 이것 법제처에 요청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증인 유상임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증인 유상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인 유상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유상임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주최로 민관군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원장 최민희 이게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 이것을 다르게 규정해서 이것을 안보와 관련한 사안 이런 걸로 소위 확장 해석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증인 유상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모릅니다.

○증인 유상임 제가 지금……

○위원장 최민희 내부에 매뉴얼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증인 유상임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최민희 저 바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증인 유상임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증인 유상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중단하시라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단하세요.

○김현 위원 제 이름은 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시고.

○증인 유상임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PPT.

SKT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26만 명이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탈해서 손해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 얘기를. 그런데 이분들은 위약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SKT는 최소 260억의 수익이 미래에 발생할 거더라고요, 논리상. 이런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세요.

이용약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납부의 무가 면제된다.

다음이요.

22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쭙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왜 유심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이버 해킹 사태의 중요한 이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사장님, 맞지요? 유심키 만약에 암호화했다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시민들이?

○증인 류정환 이번에 암호화가 안 된 것은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어차피 임시라는 것부터 암호화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좀……

○위원장 최민희 한 가지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우리가 나뉘었을 때 최소 4분의 1 해당되는 거지요.

○증인 류정환 일단 보안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 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보안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중의 하나가 유심키 암호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책사유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류정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것을 인정 안 합니까? 이것은, 그냥 유심키 암호화 안 한 것은 보안을 소홀히 한 것이다, 맞지요? KT하고 LG는 그러면 그것을 왜 해요, 소용없는 걸? 왜 인정할 걸 안 합니까!

○증인 류정환 상대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SKT 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류정환 3월……

○위원장 최민희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SKT 내부 인증서버에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증인 류정환 저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민희 이러다 특검 가요,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는 안 나간다고, 지난번에 안 나가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잘못하면 특검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려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제보가 3월 12일부터 20일, 비정상 트래픽이 SK 내부 인증서버에 발생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가 받은 제보입니다.

○증인 류정환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사실이라면 귀책사유지요. 왜냐하면 그때 점점 다 했다면……

○증인 류정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렇게 말하면 저것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기초 자료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나면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 못 하겠다’. 유영상 대표 뭐라 그랬어요?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해석 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과기정통부에게 미뤄요.

그다음.

유상임 장관, SKT 과태료 처분하라니까 ‘과태료에 비하면 SKT가 받는 손실이 월등히 크다. 수조 원에 달한다. 주가 하락으로 드러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기세요.

유상임 장관, 이게 오늘이예요. 오늘 얘기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위약금 면제를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 결과는 1~2개월로 예측하고 있다.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강도현 차관, 뭐라 그랬냐? ‘귀책사유에 해당해도 정도와 내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현재 법률 자문 내용이다.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 받았고 비교 분석 중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하는 데 한 달 반이 걸린다. 종합적으로 두 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겨 보세요.

영국은 아까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징배제로 처벌받은

에는 저희가 단 1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돌려 봤는데 없었고 과징금이 썩습니다. 2018년 40만 명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371억, 2018년 3억 명 332억 이런 식으로 과징금이 매우 썩습니다, 영국은. 그런데도 징배제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죽 얘기했겠어요? 지금 공이 어디로 넘어와 있습니까, 강도현 차관님? 위약금 면제와 관련되어 SKT가 공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과기부로 넘긴 거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과기부가 관련하여 징계를 때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 하겠다, 과기부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저희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가 장관이…… 차관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장관이 기업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유상임** 제가 기업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는 SKT 쓰세요. 오랜 고객이에요. 잘되기를 바라요.

저도 3분 더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보는 시청자들 모두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기부는 왜 이렇게 SKT를 봐주려고만 하지?’.

정확히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첫째, 신뢰하고 싶다, 신뢰를 못 하겠다. 왜? 저희가 다 보여 줬잖아요. 심지어 약관법까지 보여 줬어요, 조문이 애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보면 귀책사유가 SKT에 있고 그래서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귀책사유에 대하여 보다 꼼꼼하게 따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 분도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예 들었지요. 유심 인증키 왜 암호화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3월 12일에서 20일 사이 SKT의 인증서버에 트래픽이 과부하됐대요, 강도현 차관님.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 강도현** 사실이면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고받지 못했다는 걸로, 이것은 어디선가 보고를 안 했거나 숨겨졌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래서 제가 특검 사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이렇게 가면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으면 이것도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하도 귀책사유 가지고 그러시니까 이렇게까지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소비자들이. ‘왜 저렇게 답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 내가 1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 놓고 그 100만 원 다 안 내겠다고 할까?’, 소비자들은 SKT를 믿고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답변을 못 믿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 중이라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후 조치를 제가 실무적으로 해 놓고 그 이후로 대선 끝나자마자 이 문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면 과기부 조사 결과도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대선 끝나면 나오지요?

**○증인 강도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가 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들을 다. 그것 확인하세요.

김현 간사님, 하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10분 하세요, 10분. 다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이 아니라고 얘기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진행……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2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먼저.

○**김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틀린 거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과기부장관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고……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김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민희** 장관의 답변이.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도 틀렸고요, 장관 답변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최형두 간사의 질문이 뭐냐면 ‘국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기관 대응이 파편화돼 있다. 국정원·과기부·KISA 간 책임 떠넘기기 하고 통합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통합대응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과기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정책실 주관으로 이것이 설치가 돼서요, 장관·2차관·네트워크정책실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심각한 단계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는 거고요. 장관은 틀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실장, 답변 준비하세요.

그래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최형두 간사님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어서 허둥지둥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4월 30일 날 법사위에 가서 SK텔레콤이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 답변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관을 오게 한 거고. 그리고 강도현 차관은 장관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장관 사퇴를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속기록 보셨으면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증인 이진숙** 김현 위원,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국장이 SKT에 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시장조사관·국장조사관·국장급에서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 상황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현 위원** 그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맨 앞부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갔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갔습니까?’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증인 이진숙**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까?’라고 답변했구요.

○**김현 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을 보냈다고 뒤에 돼 있잖아요, 두 번째에.

○증인 이진숙 시장……

○김현 위원 시장조사관하고 국장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이진숙 그러니까 그 뒤에……

○김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갔다고……

○증인 이진숙 김현 위원이 말을 잘라서 제가 그 뒤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증인 이진숙 제가 상황을 아는데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저한테 사과하세요.

○김현 위원 그것 그대로 읽어 보세요. 그것 읽어 보시라고요.

○증인 이진숙 아니, 읽어 보세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막말하는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김현 위원 제가요……

○증인 이진숙 사과하세요, 저한테 먼저.

○김현 위원 막말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증인 이진숙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김현 위원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증인 이진숙 왜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십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김현 위원 계속하세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속기록 내용을 최형두 간사님께도 드리고요, 저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도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이랬어요. 질문이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에 다녀오셨냐?’라고 물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보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않았 습니다’,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책임자급에서?’, ‘시장조사관·국장조사관·국장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 이진숙 그 뒤에 화살표 한 데 보세요.

○김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갔냐고 해서 뒤에 가서 번복한 거지요. 갔다고 얘기했고 다시 물으니까 불러서 얘기 들었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뭐가 지금……

○증인 이진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이것…… 뭐가 내가 지금……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김현 위원 왜 그렇게 또 두둔하십니까? 대변인 하실래요?

○최형두 위원 두둔하는 게 아니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김현 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그러세요,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기관의 기관장도 발언할 수가 있지요.

○김현 위원 뭐라고요?

○최형두 위원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형두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주장하는 바하고?

○김현 위원 맨 앞부분에 있잖아요. 뒤에 와서 번복했다니까요, 방법을, 대화를. 다시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처음에는 국장을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갔는데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뒤에 가서 또 물었습니다.

○증인 이진숙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국장과 과장이…… 4월 28일에는 과장이 3사 통신사를 불러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라고 얘기했고……

○김현 위원 그것은 뒤에 얘기한 거고요, 뒤에 얘기한 거고요. 알고 있어요.

○증인 이진숙 4월 29일은 제가 한국에 없었을 때입니다.

○김현 위원 알고 있어요. 자, 뒤에 얘기한 거고요, 뒤에 얘기한 거고요.

○증인 이진숙 제가 한국에 없었을 때기 때문에 제가 보냈을 수가 없어요.

○김현 위원 탁자 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위원장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증인 이진숙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없었을 때입니다.

○최형두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현 위원 아니, 정리는 해야지요. 시시비비는 가려야지요.

○최형두 위원 속기록에 다 있을 테니까.

○위원장 최민희 속기록 있어요?

○김현 위원 뒤에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앞에 얘기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증인 유상임 저 발언권 주시겠어요?

○김현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합시다.

○증인 유상임 아니, 위원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발언 시간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켜진 것 보이시지요, 지금? 위원장하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저한테 아주 막말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중요한 사태가 터졌을 때 방통위가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하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거지요?

○김현 위원 확인을 하라는 것이지요, 과기부장관……

○위원장 최민희 과기부는 그렇게 했지요?

○김현 위원 28일 날 갔지요?

○위원장 최민희 28일 날 SKT 현장 갔지요?

○증인 유상임 예, 본사로 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방통위도 갔느냐를 묻는 게 이 질문의 요지예요. 요지고, 그런

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안 가셨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혹시 SKT 가셨습니까? 안 가셨지요? 안 가셨고.

그러면 혹시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느냐라고 묻게 된 것이지요, 취지가?

○김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급도 안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뒷 부분에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얘기했다’ 이렇게 답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을 만났다고 하니 그거는 가서 만났는지 불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열두 명이 현장에 잠깐 들렀다’ 이걸 뭘니까?

○김현 위원 그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열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갔다, 과장급이.

○위원장 최민희 아, 한두 명인데 이게 잘못됐군요.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과장 한두 명이 현장에 간 건 맞습니까?

○증인 이진숙 예. 그 현장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위원장 최민희 시장? 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 위원 SK텔레콤.

○증인 이진숙 어디냐면 대리점, 전국 T 대리점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리점 말하는 거지요? SK텔레콤, 현장이 아니라 대리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핀트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의 주무 부서이니 사고 현장에도 가고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 질문은 국장이라도 갔냐고 물은 건데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답이 끊겼어요.

그래서 김현 위원님, 저는 이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김현 위원님은 왜 갔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나 이럴 수 있는 맥락이고요.

○김현 위원 예, 그 얘기 한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님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지금 우리 서로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증인 이진숙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김현 간사님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말을 답변했다고 들을 수 있고, 맥락이. 그런데 제가 쭉 읽어 보니, 제가 제삼자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셔서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국회와 방통위가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또 얘기할 것 있다고 지금 과기부장관이 얘기하시잖아요, 답변.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도록……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최형두 간사님이 외국의 사례를 쪽 얘기했고 장관님까지 또 이걸 읽어 드려야 되나……

최형두 간사님이 ‘민관군 합동대응 관련 부처별 나눠져 있고 통합하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민간 영역이라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맞다. 그런데 아까 틀렸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유상임**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최민희** 기회를 드리지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세우고 답변하세요.

○**증인 유상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재난의 범위는 자연재난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국한돼 있어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이런 거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인파 사고 이런 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할이 국방부는 군, 국정원은 공공,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그것은 한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체계상에선 이게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곧 대선이 있을 텐데 이게 침해가 발생하면 대단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런 조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민관군이 다 그 조사단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관군 그다음에 공공영역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같이 좀 하자’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아니, 이거는 조직상에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래서 법제처에 이걸 한번 문의를 해 보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김현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해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도현 차관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시지요?

○**증인 강도현** 예.

○**김현 위원** 2024년 원년 디지털 대응을 위한 회의체 하면서 마련한 것에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준비한 거잖아요, 2024년 8월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종 악성코드 취약점 유포 확산, 악성코드 감염 신고접수 증가, 자가 전파 등 위협 증가, 그래서 악성코드 취약점 분석하고 백신 업데이트 및 개발, 이게 소위 말한 위기사례 주요 징후 및 필요 조치, 디도스 그다음에 기업 대상 지능형 지속 위협 그다음에 주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킹은 분명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장관님.

○증인 강도현 두 가지 매뉴얼이 있다는……

○김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걸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하고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증인 강도현 맞습니다.

○김현 위원 해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맞고요. 그다음에 해킹 관련해서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다 적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해 들어왔을 때도 시기적으로 구분이 돼요, 4단계에서. 몇 단계입니까?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시 시작하세요.

○최형두 위원 10분만 하고 딱 끝내요.

○위원장 최민희 예, 10분으로 끝냅시다.

○김현 위원 네트워크실장 나오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이것 몇 단계입니까, 지금 상황이, SK텔레콤 해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지금 관심 단계입니다.

○김현 위원 관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예.

○김현 위원 그러면 국정원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짧게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지금 간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매뉴얼에, 정보통신부의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체계가, 7쪽 위기관리체계의 도표에 보시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NSC가 있고 국가안보실 밑에 사이버안보비서관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그 밑에 국정원이 있고 저희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상으로 보면 지금 각 분야의 대응체계, 교육 분야, 정보통신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분야의 상위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체계 및 임무와 관련해서 지금 위기관리체계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있고 과기정통부하고 각 분야가 있는, 도표상은 그렇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1단계, 관심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예, 지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관심이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과기정통부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과기정통부라고 얘기했던 그 답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해킹이 발생했어요. 해킹으로 털렸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되면 격상이 되겠지요. 그때부터 2단계,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계나 심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있었던 매뉴얼, 아까 얘기했던 7쪽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관심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권고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유심칩 교체하라고. 그러면 국정원이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주의, 경계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하고 실장은 같이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관심이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런 공문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니다만……

○**김현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에.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기부장관의 컨트롤타워로 차관과 실장님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칩을 바꿔라라고. 네 가지 지침을 보냈잖아요, 각 부처에.

그러면 각 부처의 받은 공무원은 해당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범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국정원이 이른바 안보폰의 운영기관들한테 그걸 보내야……

○**김현 위원** 아니예요. 전체 정부 다 보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저희들은 그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 부처에게 유심칩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SK텔레콤이 그게 아니라 유심보호서비스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칩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에 답변을 못 해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간사님, 이 부분은 국정원이 안내한 이 사건에 대한 개입 차원이 아니라……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방통위는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 논의에? 방통위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저희 민관합동조사단의 참여 기관으로 방통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기관리체계 및 임무에 들어가면 정보통신 범위에 과

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있지만 정보통신 기업 등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 뒤에 가면 관련되어 있는 부처도 같이 논의하게 돼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예, 그 필요한 협의는 방통위 실무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논의 구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를 관할하는, 부위원장에게 질문하겠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심보호서비스를 강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4월 30일 날 한 겁니다.

그게 강제입니까, 보호시스템이, 가입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김현 위원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장관님께서 아까 법제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나 이런 체계에서 보여지는 그 구조에서 각 분야별 담당하는 상위의 국정원에 사이버위기관리단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상위법들에서는 분명히 정보통신망법상의 민간 분야는 과기정통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약간 저희로서도 혼선이 있어서……

○김현 위원 아니, 그래서요 혼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확히 매뉴얼상에, 이게 어제오늘의 매뉴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 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관리시스템 표준매뉴얼에 국정원이 들어간 겁니다, 민간 영역에. 그래서 그건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예, 개정은 23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국정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까 김우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엄을 준비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SK텔레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강도현 차관님. 이 기관이 SK텔레콤을 정보 보호를 하는 그 시설로 살펴보시겠다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그 결과 나왔습니까?

○증인 강도현 그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에 해당 서버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추진하시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법조인으로 지금 방통위 상임



위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맞지요?

○증인 김태규 예, 질문 주시지요.

○김현 위원 지난번에 ‘65세 이상의 유심보호서비스 강제가입과 관련한 것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그런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증인 김태규 일방적으로……

○김현 위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2400만 명가량 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김태규 위원장이 강제가입이라는 표현을 그날 썼기 때문에 오늘 꼭 불러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통위는 주무 부서입니다.

○증인 김태규 답변드릴까요?

○김현 위원 아니, 주무 부서예요. 그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 이후에.

○증인 김태규 지난번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강제가입하고 자동가입이라는 표현이 서로 배치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사표현의 합치가 있으면 그런 강제라는 표현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자동으로 가입되는 그 자체가 일방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억지로 팔을 비틀거나 아니면 욕박질러서 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강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 위원 거기까지 알겠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요.

강제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만 또 천착하시는데……

○증인 김태규 아니, 그래서 그 표현……

○김현 위원 ‘65세 이상의 유심보호서비스 강제가입과 관련해서 과기부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2500만 명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증인 김태규 당시 얘기가 나올 때도 처음에는 고령층에 대한 보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60세도 얘기 있었고. 그런데 고령층 기준을 65세로 잡으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다 해서 65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김현 위원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분들, 국민 2500만 명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가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SK텔레콤이 저희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수렴해서 신속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다 가입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질문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방통위는 어떤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태규 지금 65세 이상 부분은 저희들……

○김현 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넘어갔고요.

○증인 김태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과기정통부의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를 기준으로 아마 SKT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위반이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회신 답변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 법률 검토 내용이요?

○증인 김태규 65세 부분은 아마……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지난번에 법률 검토 이것 말고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증인 김태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 쓰신 그대로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유심보호서비스 강제가 입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때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 얘기한 걸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것은 약관을 변경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지요, SK텔레콤.

○증인 김태규 그렇게 한 것은 SK에서, 약관은 SK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해서 잘 처리했으면 그 역시도 잘된 일입니다.

○김현 위원 지금 제가 부위원장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약관을 변경해서 가입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한 건데 왜 김태규 부위원장이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은 65세 이상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거지요? 김태규 부위원장,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증인 김태규 예.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유심보호서비스는 약관을 변경하면 되는 건데 방통위는 그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지에 대해서……

○증인 김태규 약관은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법률적인 공법과…… 공법 부분 아닙니까? 법률 적용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관 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아홉 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내용이 법률 자문을 구할 내용인지……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법률 검토를 의뢰했겠지요? 이 약관 변경이 법률 검토를 할 내용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김현 위원** 다시요. 잠깐만요.

유형? 어떤 유형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김현 위원** 그러면 과기정통부랑 협의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기정통부가 약관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SK텔레콤으로부터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티월드에 가입한 사람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안해하고 유심칩이 없으니까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방식을, 업다운 방식을 바텀업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 등을 다 고려해서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답변……

○**위원장 최민희** 약관 변경할 때 SKT가 약관 변경했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그 약관 변경하고 과기부에 신고했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과기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 검토 했습니까?

○**증인 강도현** 이 건이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건이어서…… 일단은 약관에 대해서, 원래는 SKT가 전적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시스템이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65세 정도에 대해서는 강제로, 그 당시의 용어 자체가 일괄 변환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강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약관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제반사항에 금지 행위 소지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하니 신속하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약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관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수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고 제가 시작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신속히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강도현** 예, 그것은 제가 했던 말입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방통위는 법률 검토를 또 그걸 한 거예요,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

라고 했고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현 차관께서 지난해에 발표했던 그 시스템을 작동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올해는 왜 안 합니까? 위원회 가동하시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던 거고요.

네트워크실장님께서서는 장관님한테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장의 지적과 그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양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 검토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관리가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4월 30일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이 안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부하고 방통위하고 개보위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걸 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 유상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질문한 게 아니고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국장님 역할을 하시고 차관님은 차관님 역할을 하시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시장 조사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 국장님은.

천지현 국장님, 제대로 일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듣다 보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나 소비자들은 이게 과기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 서버 감염 위험도 있고 장관님이 답변을 계속하시면서 이게 무슨 다른 더, 위기 단계를 높여서 대응해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을 불러일으켜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갑자기 더 불안해진 거지요.

과기부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뭔지 모르……

○**증인 유상임** 아니요. 미치는……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답변하라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불안을 증폭시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답변하신 것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가지?’, 그리고 추가 서버가 더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도 걱정을 더해 주는 거라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히 SKT는 과기부가 민관합동조사단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로 SKT를 징계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이런 식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증인 유영상 과기부가 그런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조치를 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신 거지요?

○증인 유영상 현재 상태로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그러신다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위약금을 물고라도 변호이동 하실 분 하시는 거고 위약금이 걸려서 못 하시는 분은 남는 거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SKT 차원에서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제가 구체적인 것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인정하고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영상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장 최민희 그런 거지요?

○증인 유영상 예.

○위원장 최민희 SKT는 이런 입장인 것을 다 같이 숙지하겠습니다.

과기부는 지금도…… 이게 28일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28일부터 한 달 반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한 달 반입니까, 필요한 시간이?

○증인 강도현 통상 아까 말씀드린 28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28일부터 한 달 반이에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28일부터 한 달 반.

○증인 강도현 위원장님,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점은 28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조사가 나오는 게 한 달 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조사 결과부터 받고 싶거든요.

한 달 반은 6월 12일입니까? 6월 11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 이런 거지요?

○증인 유상임 제가 처음 답할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강도현 차관이 ‘조사에 한 달 반 그리고 나머지 법률적 판단과 같이 종합적 판단에 두 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도현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증인 강도현 장관님 답변드릴 때도 제가……

○위원장 최민희 똑같잖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증인 강도현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확인하겠습니다. 한 달 반까지 조사 끝내시고 그 조사 결과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법률적 검토가 한 군데 나왔고, 나머지 두 군데 언제 나와요?

○증인 강도현 어제 받았습시다. 어제 오전에……

○위원장 최민희 어제 하나 나왔다고……

○증인 강도현 그 버전들이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세 군데 다 받았습니까?

○증인 강도현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님이 주셨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에 있었기에 그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네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하나 더 해서 4개, 그것까지 다 받았다는 거지요?

○증인 강도현 현재 받았는데 비교해서 좀 봐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은 얼마 걸려요, 비교해서 보는데?

○증인 강도현 일단 그것은 법무법인들 의견들이니까요. 그것을 판례하고 조사 결과하고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두 달?

○증인 유상임 최종적으로는 민관조사단 결과를 다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두 달이요. 아니요?

○증인 유상임 예, 그래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위원장 최민희 두 달이요.

○김현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최민희 그것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분 더 드리세요.

○김현 위원 장관이 답변한 것을 메모를 찾아 가지고요. 아까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다면 최형두 간사의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최형두 위원 그 질문이 아닙니다. 김현 간사님, 남의 질문을……

○김현 위원 아니요. 장관에 대한 답변이에요.

○최형두 위원 다음에 짧게 제가 2분 이야기할게요.

○김현 위원 ‘절실히 깨닫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준매뉴얼이 있다는 걸 얘기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요.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KT나 LG가 지금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안 된 경우도 있겠지요? SK텔레콤은 어쨌든 2400만 명을 다 넣었는데 LG하고 KT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이 안 된 고객이 상당수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증인 강도현 아직 숫자는 확인 안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LG나 KT가 유심보호서비스 없잖아요.

○증인 강도현 숫자 확인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방어벽이 뚫려서 해킹을 당했는데 SK텔레콤은 어쨌든 이걸로써 유심칩이 아니더라도 보호장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T나 LG도 방어벽이 뚫려서 해킹당할 우려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LG나 KT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위기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과기부 차원에서? 그러면 나머지 통신사의 유심보호서비스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약관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증인 강도현** 예, 당연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인 강도현** 그래서 지난번에 통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점검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단 급한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 확대되는 것 확인했고……

○**김현 위원** SK텔레콤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증인 강도현** LG하고 KT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어차피 일괄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5월 1일 날. SK텔레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해서 KT나 LG도 적용해야 됩니다.

○**증인 유상임** 약간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해킹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원하는 분들이……

○**김현 위원** 조사를 하셔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해킹이 들어오면 KT나 LG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한번. 네트워크실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LG나 KT는 안전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간사님, 지난 5월 3일 연휴 첫날 장관님께서 직접 가락동에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통신 3사 보안리더하고 플랫폼 기업 다섯 군데 보안리더들을 모으셨고요. 그 전에 차관 또 실장, 국장, 타 통신사,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저희 채널이 되는 한 6000여 개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보안 점검과 대응에 대해서 최고조의 경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가입 문제 이런 부분도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자동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지금 통신사들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가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5000명을 다 불러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혹시 모를 피해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고 주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관심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단계가 지금 위기관리 매뉴얼상 관심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현재는 하여튼 관심 단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잖아요. 올라간 것이지요.

○위원장 최민희 관심 단계입니까, 주의 단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관심 단계입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주의 단계 수준의 선제적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만……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최형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것은, 김현 간사도 제기했지만 이런 것이 또 재발될 수 있으니 다른 통신사는 안전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SKT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여기에 대한 여러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SKT가 명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더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 뒤에는 국가 단위의 해킹그룹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공격이고 그 공격이 매우 분산된 형태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오늘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그냥 하루 지나가니까 KISA는 KISA대로 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SKT는 SKT대로 모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국민 보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뚫리면 전 국민의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신상 정보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더 큰 준비를 해야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같이 그런 나라들도 부처 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서 그 장벽 때문에 서로 침범하기도 어렵고 서로 협력하기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여러 일이 났는데 이 일이 공유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도하기는 하지만 911 보고서 때 보면 미국이 알카에다의 침공을 충분히 예상했는데, 지금 사이버 테러라는 것도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국민경제나 국민 재산에 미칠 또 국민의 여러 신상 정보 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타격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 하루 청문회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됐습니다.

○증인 유상임 명심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하신 말씀은 여야가 혹은 1당·2당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일로 보입니다. 국가의 어떤 비상 매뉴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비상 상황이 아니면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 박민규 위원, 김장겸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처와 관계 기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SK텔레콤 측은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과기정통부에 안건을 떠넘기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대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SKT 사태 계속 모니터링 및 통신사 보안점검 TF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동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 이동엽 과방위 입법조사관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진 1명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신동주 정책연구위원과 전인성 연구위원께서는 대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과방위 TF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텔레콤의 사후 대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들도 수고하셨고 과방위 행정실 직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증인(3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2025. 5. 8.(목) 14:00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철회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	2025. 5. 8.(목)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석요구 의결 시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 참고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2025. 5. 8.(목) 출석요구 의결 시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추가

## ○출석 위원(18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희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 ○청가 위원(2인)

이준석 조인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정책기획관 전영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출석 증인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상(SK텔레콤 사장)

류정환(SK텔레콤 부사장)

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출석 참고인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이상 3건 4월 29일 회부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7)

이상 3건 5월 1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이상 2건 5월 2일 회부됨